

제429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임시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14일(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인사혁신처 소관
  - 경찰청 소관
  - 소방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공무원연금기금

상정된 안건

-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1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인사혁신처 소관
  - 경찰청 소관
  - 소방청 소관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 2
  - 공무원연금기금

(09시06분 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 행정안전부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라. 인사혁신처 소관

마. 경찰청 소관

바. 소방청 소관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공무원연금기금

(09시07분)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안전부차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29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32페이지입니다.

29번, 섬 발전 협력추진사업은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해서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사업개요 박스 보시면 사업 내용에 섬 방문의 해 사업비로 50억인데 홍보·마케팅, 섬 관광프로그램, 문화행사 등등이고요. 그다음에 전남 섬 반값 여행 지원으로 10억 해서 총 60억 원을 신규 반영하자는 제안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다만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재정 당국과 열심히 싸우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게 할 거면 좀 섬을, 우리나라 유인도가 꽤 되는데…… 꼭 이게 여수하고만 이렇게 연관되는 건 그쪽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성희 위원 26년에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이것 준비하면서도 예산이 필요하고 섬 방문을 진흥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고동진 위원 일회성 예산이다?

○김성희 위원 그렇게 진행하고 나서 이제는 레굴러로 돌려야 될 텐데 내년 자체는 여수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포함되는 것도 있고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이게 장소를 옮겨 가면서 합니까? 여수 섬박람회하고 예를 들면 경남으로 넘어가서 통영 섬박람회 이런 것도 합니까? 아니면 여수 섬박람회가 딱 고정돼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섬의 날 행사는 섬이 있는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한 5억 정도 예산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섬박람회는 여수가 유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유치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63억 원 정도가 지원이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들도 잘 모르시다시피 홍보예산은 아주 부족해 가지고 아마 이게 증액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정도 기간을 잡고 여수와 그 주변에 있는 섬에 와서 엑스포 보듯이 보시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섬박람회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매년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매년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 2년마다, 엑스포 유치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0번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세부사업인데요.

그 안에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청년공동체 25팀 이상으로 해서 지역공동체 50팀을 선정해서 지역공동체 활동비, 용역사업비, 기타 일반연구비 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총 12억 5000만 원 신규반영 요청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마찬가지로 신규사업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재정 당국과 이것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지난해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2억 6000 정도를 확보해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 4000 깎여서 2억 2000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한 10개 정도 청년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회연대경제라고 하는 게……

○박정현 위원 이것은 그냥 지역공동체 활성화.

○고동진 위원 아, 이건 지역공동체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소위원장 위성곤 차관님, 알겠습니다.

이건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1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사업 건입니다.

사회연대경제 정책의 주무부처를 이제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게 됨으로써 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50억 신규반영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신데요.

구체적인 증액 예산안 산출내역은 밑에, 다음 35쪽의 박스표를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법적 근거 및 업무이관 미비에 따라 예산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 입장 말씀드리고요.

사회연대경제 통합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 신규로 편성될 필요가 있고 재정 당국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얘기지요? 감액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지금 이것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차관님?

보세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플러스 시민사회, 비영리 조직, 자원봉사, 마을공동체 이것 다 모아서 행안부에서 하겠다는 거잖아. 갖고 오겠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왜냐하면……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마을기업은 행안부, 협동조합은 기재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소셜벤처는 중소기업부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업을 전부 이관해서 행안부에서 다 하겠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실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어떻게 됐냐 하면 사회연대경제가 지금까지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서 분절적으로 운영이 돼 와서 지난번에 이것을 통합해서 주관부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돼서 지난 10월 21일 날 여야 논의 플러스 부처 간에 협의 조정을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정한 게 행정안전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통과시킬 목적으로 지금 발의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 전반적인 생태계 현황이라든지 지원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시도, 시군구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통계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되게 된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법도 안 만들어졌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법은 지금 발의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위원님들이……

○서범수 위원 그리고 보세요.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내년 예산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압니까? 이대로라면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죽 끌고 와야 되지요. 고용노동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적기업에 내년 예산이 얼마 들어 있는 줄 압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보니까 한 118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서범수 위원 858억인가 그렇고, 기재부가 하는 협동조합에 31억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고 이거는 뭐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 예산은 각 사업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요.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이거를 처음에 원칙적으로는 기재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기재부에서 워낙 반대가 있으니 행안부에 윤호중 장관께서 오시니까 우리가 갖고 와야 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그런 데다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좋다 그러면 다 끌어 모아서 행안부에서 통째

로 다 하자 하면 오케이. 그리고 거기 있는 고용노동부 예산이나 기재부 예산이나 행안부가 다 갖고 와서 하는 것은 오케이인데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부대로 예산이 작년 284억에서 858억으로 늘었고 협동조합은 기재부 예산이 16억에서 31억으로 늘었고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17억에서 52억으로 늘었고.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소위원장 위성곤 차관님, 사회연대경제를 행안부가 정책 총괄을 하는 거지요? 정책 총괄 기능 때문에 하는 거고……

○서범수 위원 정책 총괄이면 사업비는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소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사업은 또 각 사업 부서도 하고 행안부 또한 사업이 필요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사업은 행안부가 직접 주관한다기보다는 이 사회연대경제는 시도나 지방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눠 드리는 겁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국비 213억이 왜 들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게 시도별로……

○서범수 위원 차관님 말씀대로라면, 전체적으로 총괄만 하겠다라면 오케이. 그러면 운영하는 비용 몇십억이든지 얼마 들어가는 것은 좋으나 지금 국비가 213억이라고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절반, 한 3분의 2 이상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시도에다가.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용부는 고용부대로 하고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하는 건데 또 행안부가 무슨 보조금을 줘 가면서 또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니까 시도에다가 생태계를……

○서범수 위원 저는 생각에 다 끌고 와요, 그러면 오케이. 고용노동부 예산 있는 거 858억 행안부로 갖고 와요. 그다음에 기재부 31억 다 갖고 와서 사업해요, 그러면. 그런데 각 부처에서 사업하는 것 다 따로 사업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또 지금 사업하겠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보통 보면 인구 저출생 대책을 할 때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모든 예산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에서 저출산 대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연대경제도 총괄하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총괄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총괄 조정……

○서범수 위원 이거는 총괄 안 해도 다 되잖아요. 왜 총괄을 하려고 그래요?

○이달희 위원 총괄해야 될 이유 있나요?

○박정현 위원 총괄해야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거는 예를 들어……

○서범수 위원 이때까지 잘해 왔는데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를 들어서 사회연대경제도 시도 단위나 시군구 단위에서도 다 분절적으로 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기재부에서 하라 그래요. 기재부에서 안 되니까 지금 행안부가 끌고 오잖아요. 원래 기재부에서 하려고 하다가 반대가 심하니까, 윤호중 장관께서 기재위에 있다가 장관으로 오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끌고 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꼭 그게 아니라……

○이광희 위원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예,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지금까지 우리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각종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또 이런 전체적인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회적경제 규모가,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우리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활성화가 좀 덜 돼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도 대체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비해서도 우리가 반도 안 되는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관리와 장기적인 전망들을 담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연대경제로 전환시켜서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리고 이것은 중앙정부 주도보다는……

○이광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에서 혜택이나 혹은…… 전부 중앙에서 컨트롤하고 일은 지방에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효과가 뭐가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가장 큰 것은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개별 부처와 직접적인 사회적경제 주체들하고만 연결돼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재부나 고용노동부는 시도나 시군구의 역할을 좀 간과하고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단위를 총괄 조절해서 그 규모도 좀 늘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관 부처를 행안부가 함으로써 그것을 총괄 조정하고, 이게 또 약간 정부의 성향에 따라서 위축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가는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 예산을 갖고 지금까지의 사회연대경제의 전반적인 실태, 마을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이런 현황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시도마다 이것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저희 예산 250억 중에 170억, 그거는 시도에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범수 위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비 매칭 안 합니까? 제 이야기는 이거예요. 행안부가 그런 욕심이 있고 통합 거버넌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면 전체 다른 부처에 있는 예산 다 끌어 와서 거기서 해요. 왜 다른 부처에 있는 예산은 그대로 증액을 시켜 놓고 또 행안부는 행안부 사업을 하겠다고 250억이라는 돈을 달라 하느냐고요. 좋다, 통합 거버넌스 하는 데 몇십억 넣어, 나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무슨 또 행안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250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원장 위성곤 답변 전에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차관님, 여기 증액예산 산출내역 보면 우리가 예산을 쓸 때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진짜 사업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달희 위원 저는 서범수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통합 후에 일부 지역에 가 보면 중복되는 거, 아까 차관님 말씀처럼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복이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거랑 또 마을기업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협동조합이랑 막 이렇게 산재돼 있으니까 일부는 중복되는가 해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업이 단위별로 다 다르고 관리가 잘 되고 있거든요. 각자 단위사업이고 한테 하나하나 보면 협업 발굴 및 규모화 자원, 국내외 교류 확산, 통계 관리, 거버넌스, 우수사례 다 각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을기업만 해도 지역에 가면 시도에서 전부 경진대회도 하고 상도 다 주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상도 다 주고 대상은 어느 시도, 어느 팀 다 주고 하고 있고 박람회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다 코디할……

행안부가 돈 버는 부서도 아닌데, 이거는 정말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경제 마인드를 가지고 작은 3명, 4명이 하든, 5명이 하는 협동조합도 키워 내고 마을기업도 키워 내고 이렇게 하는데, 각자 두면 각자 특성에 맞춰서 오히려 잘 크는 건데 여기 끌어다가 돈 이렇게 많이 들어서 R&D, 이거 전부 각자 다 하고 있는 걸 왜 또 돈을 들어서 또 옥상옥을 만들어요? 이거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역의 현장에 가서서, 이거는 그냥 위에서 책상에서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서 기재부가 하는 사업…… 그리고 자활기업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활기업은 복지부에서 하는 거기 가 보면 장애인센터들하고 다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현장조사를 현장에 가서 발로 좀 뛰어서 페이퍼를 다시 작성해 오셔서 법안할 때 녹여 내려서 검토해 보자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 제가 증액예산 산출내역 보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각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자활기업에 하던 걸 그냥 한 쪽지씩 전부 다 갖다 넣어 놓은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뒤도 하는 걸 왜 여기 돈을 또 얹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가져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저도……

지금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반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미 다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개별 법률에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기서 오히려 중복되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이게 컨트롤이나 조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별로 중복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디선가 이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시각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어느 당의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정책적으로 서로 해 주기도 하고 안 해 주기도 하고 이런 불안정성이 발생해 가지고, 이전에 마을기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많이 성장을 해 왔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가지고 똑씩 망하게 해 놓고 다시 그것을 그다음에 와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통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게 기본적으로 이 안을 만든 사람들, 제안한 사람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서로 다른 시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달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봐서 좁혀질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보류해 놓고 다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우리는 경북에서 중앙정부에서 반대해도 지방정부에서 다 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희 위원** 제가 2013년, 2014년도에 신계륜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때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서 65명이 공동발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유승민 의원께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같이 상의하셔서 새누리당 법안으로 발의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67명이 발의에 동참을 하셔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숫자였어요, 숫자로는.

○**이달희 위원** 그래서 우리 정부가 통과시켰잖아요, 이때.

○**김성희 위원**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같이 모아서 그때부터 이게 통과가 될 여러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여하튼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무산이 됐는데, 이때 영국이랑 지금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 규모가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했는데 영국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지고 그 10년 동안 사회적경제에 대한 많은 지원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가 최근에 하여튼 GDP 5% 이상을 담당할 정도로 자라났고 또 이 기금도 2015년 기준으로 한 1조 정도, 임팩트 경제에 쓰는 기금이 1조였다 지금 8조로 늘어났거든요. 경제도 굉장히 커지고 우리나라가 너무 대기업 위주로 가고 있었는데 영국은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들이 코로나를 견딜 만큼 튼튼하게 성장해오는…… 우리가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여야의 대립으로 해서 논의한 것처럼 돼 버려서 너무 안타까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경북에서는……

○**이달희 위원** 아니, 이걸 반대하는 거지.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경북도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행안부가 가져온 것은 행안부가 전부 다 컨트롤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사회적기업을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와서 ‘이제 가져와라’ 그러면 당장 내놓고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것은 또 중기벤처부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거기에 기금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배치를 해 주고 행안부가 전반적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랑 이 사업을 쪽 준비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행안부가 맡아서 하고 각각의 사업 주체는 필요에 따라서 중기벤처부나 고용노동부랑 진행하도록 만들어 줘서 사회적경제 규모를 좀 키우는 것은 저는 여야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활동을 통해서 각 자치단체가 잘 성장할 수 있고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저는 돈……

○**소위원장 위성곤** 이달희 위원님, 잠깐만……

○**이달희 위원** 사회적 경제를 키우는 것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찬성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은 고동진 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나중에 발언권 얻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저도 발언권 좀 주세요.

○양부남 위원 저도 발언 신청해 왔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다 한 번씩 드릴게요.

○고동진 위원 한번 질문을 합시다. 250억 중에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협업 발굴, 특히 두 번째, R&D 기반 규모화 및 스케일업 지원에 85억이 들어갔는데 R&D 기반 규모화 및 스케일업 지원 이 85억이…… 누구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소위원장 위성곤 담당 국장……

○고동진 위원 국장이시라도 좋아요.

○행정안전부지역사회혁신TF팀장 박원재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 TF……

○고동진 위원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지역사회혁신TF팀장 박원재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 TF 팀장 박원재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저희가 사업을 조금 더 디벨롭(develop)해서 R&D보다는 사회적 가치 창출모델 발굴 그다음에 지역순환경제 구축모델 발굴, 두 가지 사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회적 가치 창출모델 발굴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후, 지방소멸, 주거, 돌봄 등 정부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지역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순환경제……

○고동진 위원 그러면 그 일을 한다는 얘기는 어디다 용역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지역사회혁신TF팀장 박원재 저희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지역 문제에 대해서……

○고동진 위원 결국은 지자체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지역사회혁신TF팀장 박원재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지역 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보조하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성희 위원님 의견에 내가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이게 아직 법적 근거도 없고, 물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1소위에서 이 법안을 검토하기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거예요. 정부 부처에서 중소벤처부에서도 하고 어디서 하고 어디서 하고 행안부에서 토털 거버넌스 내지는 부족한 부분을 메꿔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게 조화롭게 하모니를 가져가는 건 필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단다, 거의 한 250억 예산을…… 이게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보여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처음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필요한 거고 그다음부터 필요하다고 보진 않고요. 그다음에 250억 중의 170억 정도는, 시도가 17개 있지 않습니까. 시도에다가 우리 10억, 지방 10억 해서 한 20억 규모로 시도별로 또 자체 시스템을,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거예요.

○고동진 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첫해에…… 이런 R&D가 필요하고 뭐 하고 그런 의미는 일리는 있는데 예산을 보면 상당수가 홍보, 박람회 이런 성격이 커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법적 근거도 없고 우리 다음 주 소위도 있고 김성희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게 오랫동안 이야기가 돼 왔던 건데 근거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예

산 규모의 적정성도 같이 보는 게 옳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감안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저는 세 가지 지점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질의라기보다는 우리가 공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시장경제의 실패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가 있음에도 시장경제에서 담을 수 없는 부분, 이달희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담을 수 없는 부분을 살려서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살려 보자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행안부로 온 것은 지역 중심, 지역 기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통합적 관리가…… 저도 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경제,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각각의 틀들도 있고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하는 것도 있고 보건복지부가 하는 각각의 사업의 가짓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지역에서 보면 전체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에 대한 기반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해 줘야지 실제 이게 활성화가 될 텐데, 그래서 그 기반을 지금 구축해 보자는 취지가 가장 강한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사회적경제 규모를 어느 정도로 키울 건지에 대한 비전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 아까 앞서 과장님인지 말씀하셨지만 사회적경제는 사실은 지역경제를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도 어렵고 국가경제가 여전히 취약한 부분에 이게 바람이 불면 지역경제는 더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역 내부에 단단한 지역경제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확장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큰 성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뿐만 아니라 지자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를테면 이탈리아 볼로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세계적인 경제 바람이 불어도 협동조합이 차지하고 있는 기본 비중이 35% 이상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굉장히 강건하거든요. 그런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이 틀 하기가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발언기회 얻기가 힘들어요.

사회적경제의 주체가 제가 알기로는 재활기업이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자활.

○양부남 위원 자활.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이 있고 또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3개의 기업은 뭔가 근거 법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그런 모법이 없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없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은 만들어지면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예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논란이 없겠지요. 이 법은 법안소위에서 잘 검토되리라고 믿고.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냐가 우리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런데 차관님,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이러한 지금까지 기존의 사회적기업 4개인가 몇 개 되는 것을 통합하고 이런 것 외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의 경제 주체들까지 다 아우르는 사업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양부남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각 개별법에 의해서 또 각 부처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서범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올해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1180억 간 것을 이렇게 봐서 이 정도는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이라 그러면 저희가 그 금액보다 좀 줄여 나가고 행안부가 마을기업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도, 지역 주도로 협업해서 효율화시키겠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R&D는 저희가 사회적 가치 창출모델인데 예를 들면 지금 통합돌봄시스템 이런 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3월부터 해 가는데 그걸 모두 공무원들이 가서 하면 너무 어렵고 인력 증원이 많은데 이것을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 보겠다, 우리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주고 예산 지원도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공동체를 되살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예전에는 중앙부처가 ‘이렇게 하세요’인데 시도별로 자기들 특성에 맞게 그런 돌봄체계를 꾸려 나가는 거거든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 내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양부남 위원 그리고 그것 외에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체들까지도, 이것 방금 말한 4개의 기업 주체 말고 다른 주체들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더 나올 수 있지요.

○양부남 위원 발굴해서 포섭하려고 하니까 돈이 드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예를 들어 유통경제 같은 경우 도내에만 되는 유통 그런 것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농산물이나 이런 것, 탄소도 줄여 나가면서. 그런 것을……

○양부남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4개의 사회적기업 말고 사회적으로 공헌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발전을 줄 수 있는 다른 주체들을 발굴해서 포섭하려니까 돈이 든다 이런 취지지요. 그걸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다 모으니까 좀 많아 보입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소위원장 위성곤 이달희 위원님 1분만 하고 이걸 이제 서로 다 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보류하고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쓰십시오.

○이달희 위원 제가 지방행정에서 있어 봤던 사람으로서 이것은 정말 책상에서 짠 거다.

첫째, 저 사회적경제 키워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사회적경제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된 것을 공모가 있으면 다 합니다, 다 갖고 와서. 그러면 이것은 어느 시군이 맞겠다, 이것은 어디가 맞겠다, 코디를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바보입니까? 놀고 있습니까? 한 부처에서 거꾸로 위에 다섯 개 부처에서 하는 것 다 챙겨서 잘 코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옥상옥이

됩니다. 이것은 오히려 일을 못 하게 만드는……

차라리 그 돈을 협동조합이나 우리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시다. 그러면 사회적 경제가 김성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활성화됩니다. 지역공동체, 지역 사람들이 더 고민을 하게 해야지 왜 우리 행안부가 고민을 이렇게…… 돈을 줍시다, 사회적경제 키우도록. 우리 마을기업 예산 왕창 내려보내 가지고 키워 봅시다. 그런데 왜 이걸……

○박정현 위원 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이달희 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옥상옥을 만드는 겁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다 말씀하셨고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할 얘기가 있지만 말의자로서……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2번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인데요. 세 꼭지여서 위원장님, 이거는 아울러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세 꼭지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첫 번째는 2025년도에 신규 지정이 된 마을기업이 57개소가 있는데 이 당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 가지고 그 예산 14억 2500만 원을 신규 반영 하자는 의견이시고요.

다음 두 번째는 37쪽 첫 번째 박스입니다.

청년마을기업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추가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3억 1000만 원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마지막으로 재지정 마을기업을 지금 내년도에는 20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거를 좀 더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세 가지 건에 대해서 모두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증액이다 보니까 재정당국과 잘 협의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여야 위원님 다 하셔서 증액하는 걸로 해도 되겠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3번 복합재난 대응 인구감소지역 집약형 도시 시범사업을 위해서 40억 신규 반영 제안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기본적으로는 수용하는 방침이긴 한데요. 일단 요게 액수도 40억 원이니까 기본계획이 먼저 잘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40억까지는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 정도 먼저 세워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 마찬가지로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본계획 수립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억 정도면, 기본적으로는 2억 들 것 같고요. 또 컨설팅 이런 것 하면 5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0억 전후로 되는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콤팩트 시티에 대해서……

○이달희 위원 이것 설명을 위원장님, 제가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영덕과 청송이 있는데요. 영덕은 수해가 계속 났는데 이분들을 수해나는 지역에서 한쪽으로 몰아서 콤팩트시티를 만드는 거고, 청송은 이번에 산불 나서 모듈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 많은 노인 한 분이나 부부 이렇게 있는 경우는 거기에 또 새로 집을 지어서 폐허가 된 마을에 계시는 것보다 다 모아서 콤팩트시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지역에서 하는 건데 이것은 재정당국하고 또 협의도 하고 우리 지역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형수 의원 지역입니다. 또 야당의 예결위 간사기도 하니까 이분이 따면 해 보고, 우리가 행안위에서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어 하시는 국정과제의 54번에도 있고 국정목표 3 위에도 있습니다.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그래서 이것은 한번 올려보고 그분이 따서 해 보면 행안부 입장에서는 아주 건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못 하는 거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많이 따 주시면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한번 올려 보시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행안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을 설득하십시오.

○양부남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보려고, 잘 몰라서……

이제 도시를 만들면 그 지역에 다 이주해서 거기서 삽니까?

○이달희 위원 도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있는 읍내나 이렇게 안정적인 데, 물난리도 안 나고 불도 안 나는 곳에 이주해서 그 근처의 보건소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읍에다가 이 집을 만들어 놓으면 면 단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다 이주합니까?

○이달희 위원 면 단위요?

○양부남 위원 예.

○이달희 위원 다는 아니지요. 아주 산골에 가 보면 2채·3채 있는 집인데 이번에 산불이 났는데 옛날에 50채, 100채씩 있다가 두세 가구 있는 마을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인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원하는 분들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원한다면……

○양부남 위원 이주해서 사는 겁니까?

○이달희 위원 예, 집 자체를 옮기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운타운으로 다 들어오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복합재난형은 아니지만 일본의 경우는 농촌인구가 소멸되어서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분포해 살게 되면 도시 운영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넓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살게 만들어서 빈집 문제 해결이라든가 도시관리 비용을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형태의 고민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어촌 지역도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합니다.

○양부남 위원 완전 무료인가요,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소위원장 위성곤 무료는 아니겠지요, 여기 보면.

○**이광희 위원** 차관님, 여기 콤팩트시티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직 없어서 기본계획이고요.

○**이광희 위원**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오히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콤팩트시티가 아직 실험 단계고, 이게 제안이 된 게 1990년대에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른다고 제안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실행해 본 적도 없고 시도해 본 적도 없는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위원님 한 분이 올려 가지고 돈 되면 해 보겠다고 하는 게 무책임하신 것 아니에요?

○**이달희 위원** 여기 국정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거는 아니고요.

○**이광희 위원** 아니, 저는 국정과제라고 해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준비가 잘돼서 실행이 되는 거면 몰라도 40억 돈을 따면 하겠다, 잘해 보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그 표현은 좀 죄송하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 지금도 속초라든지 청도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아주 작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산불이 났을 때는 우리가 그냥 복구하고 산불 난 지역에 다시 그 집을 지어 주는 거예요, 2채·3채 있는 데.

○**이광희 위원** 아니, 그렇게 했는데 그 동네에서 혼자서 살겠다고 농막 쳐 가지고 들어간 분들 때문에 또 분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실험 단계에서 아직, 그러니까 실험적으로는 상상해 볼 수 있으나 제대로 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정교한 연구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이달희 위원** 당장 이것 갖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말씀드렸던 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주민의 설득입니다. 그분이 나 여기로 나와서 여기……

○**소위원장 위성곤** 설득 문제가 아니고요.

○**이광희 위원** 아니, 그분은 설득했는데 다른 분이 와서 만 데 살아 버리니까.

○**고동진 위원** 내가 이것 잠깐, 왜냐하면 제가 지역을 갔다 왔었기 때문에……

○**소위원장 위성곤** 이것을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고동진 위원** 1분만 할게요,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이광희 위원** 아니, 이것 아이디어 낸 분하고도 얘기 많이 해 봤고요.

○**고동진 위원** 여기 청송하고 영덕을 내가 갔다 왔어요. 그런데 영덕하고 청송에서 산불이 나도 이렇게 난 산불은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한 번도 피해 안 받아 본 분들이 이게 너무 황당했던 거야. 그래서 집이 완전히 다 전소가 돼 버려. 차 바퀴까지 다 전소가 돼 버려. 그러니까 여기가 또 위험할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읍 가까운 데로 좀 모여 가지고 사는 것 어쩌냐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던 아이디어거든요. 이번에 산불이 난 거고……

○**소위원장 위성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논했기 때문에 이광희 위원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정도는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박정현 위원** 예, 기본계획 정도로 잡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기본계획 정도, 5억 정도 증액해서 한번 아이디어를, 상상력을 만들어 보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두 곳이니까 그러면 10억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박정현 위원 저기서 5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각 단위별로 계획이 아니라 나눠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한 5억 정도로 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5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5억 정도로 해서 하는 걸로 하지요,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예,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5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9쪽은 저희가 이걸 자료로 넣을까 말까 좀 고민하다가 위원님께서 질의를하신 부분이라 뺄 수가 없어서 넣었는데요.

용혜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 저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농해위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에 7개 군이 반영돼 있는데 14개 군으로 하고 국비 비중도 60%로 상향하기 위해서 4258억 4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이게 저희 위원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거기 말기세요.

○소위원장 위성곤 이거는 심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요.

○이광희 위원 그런데 차관님, 질문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말은 농어촌기본, 제가 이것 이번에 되는 것 보면서……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잠깐만요. 이광희 위원님 이것은 우리 소관 사항이 아니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소관 사항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도 못 합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그거는 나중에 정책질의 하실 때 하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위원님,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관을 해야 된다는 건 부대의견에 용혜인 의원님께서 따로 내셨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이광희 위원 저도 부대의견, 제 의견도 실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위성곤 35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35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인데요. 이것도 위원장님, 꼭지가 같아서 다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먼저 국가채무의 급증 및 현·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급증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850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고요. 또 정부 원안대로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그다음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고려해서

지방비 부담분 69억 1900만 원이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으시고, 경기도 지역에 필요분만큼 국비지원이 없다는 이유로 165억 64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성하는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는 제안으로 10억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감액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 유지안의 두 번째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추가 지원은 저희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법도 통과, 개정이 돼서 국비지원 근거가 있는데요. 그 안에도 특정 지역, 그러니까 더 어려운 지역,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박정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69억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게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도 서울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재정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 지원하는 거는……

○소위원장 위성곤 반대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다음에 이해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국비가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소위원장 위성곤 찬반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그래서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어렵다? 반대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도 반대한다?

○이광희 위원 위성곤 위원 거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딱 제주도로 특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한 지역만 하면 형평성 논란도 있고 또 이게 운영비이기 때문에 좀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서울시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역화폐에 지원을 하면 안 되는데요. 올해 보니까 69억 1900만 원을 지원했더라고요, 2025년에. 올해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했냐 하면 실제로 서울시 전체가 불교부단체긴 하지만 구별로 따지면 굉장히 열악한 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를 지원해 달라는 취지에서 낸 거고요. 이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거니까……

○고동진 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역차별을 받는다고 일부 생각을 하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박정현 위원 이것 다 회수시키시고……

○고동진 위원 서울이 경기도보다 안 좋아요, 재정적으로.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도 빼고 서울도 빼고……

○박정현 위원 우선은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아주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 하나하고.

또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매출 30억 규모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매출 30억 규모도 조금 우리가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점차 지자체에 자율성을 주는 쪽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차관님, 1조 150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조 1500억은 저희가 올해 추경이 한 1조지 않았습니까, 4000억, 6000억 돼서? 그래서 1월부터 6개월 동안 발행된 상품권을 보니까 한 월 2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조 정도 됐고 올해 연말 아마 한 24조 정도가 상품권 전체로 발행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상반기에 얼마 판매됐다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10조 정도 됐습니다.

○서범수 위원 상반기에 10조잖아요. 그러면 1년 20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저희 목표가 24조 정도입니다.

○서범수 위원 20조지요.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숫자가, 사실은 3000억 수준은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뭐냐 하면 지난 코로나 시절에 했을 때의 3000억 수준으로 가자 저는 이 이야기인데 좋습니다. 이것 조금 양보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 올해 1조 정도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올해 1차 추경에 4000억……

○서범수 위원 상반기에 10조잖아요, 상반기 판매량이 10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러면 전체로 치면 20조 정도 된다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좀 더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뭘 또 좀 더 된다고 예상을 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할인율이 좀 높아져 있거든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정 이게 필요하다면 20조라고 한다면 지금 국비지원율이 평균 4.8%쯤 되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비지원요?

○서범수 위원 예, 3·5·7이잖아요, 4.8.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평균 내면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 곱하기 하면 9600억, 9자가 나와요. 9600억 숫자가 나와요.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어제 가만히 앉아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 올해 상반기에 10조 하반기에 10조, 20조. 그렇지요? 20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그런데 자꾸 24조라고 우기지 마시고 나온 게 그렇잖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런데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는 국비지원이 없지 않았습니까, 추경이 늦어졌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그런데 갈수록 이 판매액이 줄어 들어요. 2022년에 2조 7000억, 23년에 2조 900억, 24년에 1조 7000억, 갈수록 판매액이 줄어 들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것은 국비지원이 없었지 않습니까?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자체 발행만 본 거고요.

○서범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왕창 깎고는 싶은데 좋다 이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밀어붙일 테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게 이거지요. 상반기에 얼마더라 하니까 10조더라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하반기에 10조, 그러면 20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하반기에 더 될 수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평균해서 4.8% 곱하기 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9600억. 그래서 1조 1500억에서 9600억, 한 2000억 깎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국비지원율도 더 높고……

○서범수 위원 사실은 우리 당에서는 이것 죽어도 안 된대요, 우리 당에서는.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나눴으니까요.

이 부분의 상품권 발행액에 대해서는 지금 쟁점인데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제안한 블록체인기반 구축 및 시범사업을 발행사업에 넣어 버렸어요, 신규사업으로 편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발행사업이니까 정부 측의 입장에서는 발행액에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세부사업이고요. 아마 이렇게 이게……

○소위원장 위성곤 신규사업으로 제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신규사업, 이것은 이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신규로 반영될 수 있겠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신규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지난 국감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지역의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은행 기반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지역화폐 기능보다 순환형 지역화폐가 훨씬 더 유리하더라, 이게 부여군 굿뜨래 사례를 보면. 그래서 시범지역에 ‘제주지역’이라는 단어를 뺄 테니까 이 사업을 좀 반영을 시켜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이것 변경해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내역사업으로 신규반영으로 표시돼 있긴 있습니다, 맨 왼쪽 칸에.

○박정현 위원 저도 포기하고 이해식 위원님도 포기시킬 테니까 이 두 가지는 빼고 원안대로 그냥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위원님, 원안대로 좀……

○서범수 위원 이건 좀 보류합시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것은 보류, 발행액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한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로 2021년부터 코로나가 있을 때는 정부지원이 10%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액이 더 높았던 거고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지원이 거의 뭐 3000억 단위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칭 비율도 굉장히 약하고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서 효용성이 조금 낮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회복하면 내년에 24조 이상의 발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서범수 위원 안 될 것 같은데.

○박정현 위원 안 되면 제가 책임질게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것 가지고 일단 보류하기로 하고요.

지금 속도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요. 좀 줄여서 얘기하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안이 매우 많은데요. 처리해야 될 안건이 한 2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속도를 빨리 내야 되는데요. 짧게 말씀해 주시고 웬만하면 쟁점 되는 것은 빨리 빨리 넘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6번 사업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록물보존복원 세부사업인데요. 5·18 진상조사위 이관 종이기록물을 디지털화 하기 위한 예산 4억 9100만 원 증액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증액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부남 위원 몇 번이에요, 나 없을 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36번, 42페이지입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요? 해 주시고 재정 당국 잘 설득해서 잘하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7번 사업입니다.

전자기록관리 체계구축(정보화)사업인데요.

기록물 생산관리통합시스템 구축에 AI 기록관리 핵심기능 개발을 추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8억 8400만 원 증액 요청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수용 동의하고요,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8번, 기록정보시스템 사업에 5·18 진상조사위 이관 기록물 중 비공개기록물의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 4억 8800만 원 증액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증액에 반대 안 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9번 사업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인건비 예산인데요. 청원경찰에게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경력 적용을 위해 필요한 예산 24억 2600만 원 증액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히 정규직 전환 당시에 2년만 인정하는 것으로 다 협의가 이루어졌고 소송으로 아직 미인정 경력이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거는 재정 당국의 반대도 심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정부 측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정부청사 노후시설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부청사 중에 UPS 및 ESS 시설 관련 전기설비규정을 미충족하는 일부 청사에 대한 안전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9억 원 증액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

○박정현 위원 예결위원장님이 하신 거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1번, 이북5도 기본경비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내에 있는 행정자문위원회의 회의수당 4400만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약간 신중검토 의견인데요. 이북5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도 개편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수당 전부를 하는 것은 현재 법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여기 보면 국외여비가 있더라고요. 일단 이거 먼저 하고 저희가 법령 개정을 통해서 회의수당을 줄이거나 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견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국외여비는 얼마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외여비가 23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2300만 원?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230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좀 줄였으면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뒤에 거일 거고, 그거는.

○소위원장 위성곤 어디요?

○서범수 위원 그거는 42번 항목이고.

○소위원장 위성곤 41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41번은 일단 이거는 감액이 좀 어렵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액이 어렵다?

위원님들.

○서범수 위원 한병도 위원장님한테 껄쩍죄 걸렸구만. 이거는 대충 넘어갑시다.

○고동진 위원 넘어가요.

○이달희 위원 회의수당 줄이시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정부 측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은 이북도민 관련 단체 및 행사 지원 세부사업 중에서—42번 사업인데요—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 예산이 있는데 이게 3억 4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거를 전액 감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아까 제가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전부 다 삭감보다는 일단 국외여비 먼저 삭감하고, 이거는 한국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들어오시는 분들은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두고 저희가 이북5도위원회의 전반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게 얼마예요?

○서범수 위원 2300만 원.

2300만 원을 깎는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은 2300만 원 삭감에 동의를 했고 전액은 아니고.

그런데 왜 이북5도민에 대해서 이렇게 삭감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북5도위원회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관련되어진 사업들에 계속 삭감의견이 들어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단 이북5도위원회가 오래됐고 법적인 조직이고 위원회 자체가 다섯 분이 차관급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직위에 비해서 하는 업무가 별로 없다 이런 비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북5도위원회 구성이 이제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소속감이 좀 약해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탈북주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개선안을 인식…… 언론의 비판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2300만 원 삭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3번 사업입니다.

남북 실향민문화 육성사업 지원인데요. 이 예산은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이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남북의 문화 교류와 통일 대비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인데 2026년도에 예산 반영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억 1700만 원, 2025년도 예산분만큼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4번, 과학수사감정지원 부분인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내에 실험시설 구축 및 부검실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 등 이전비용 72억 4700만 원 증액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이게 아마도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게 재정당국과 또 긴밀히 협조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일반회계 국유기금에도 아냐……

수석전문위원님, 국유기금에도 지금 이게 포함돼 있나요? 기재위 사항인가, 국유기금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저희 부분은 예산이 없습니다, 기금으로는.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부대의견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도 부검시설이 없어서 사고가 나면 장례가 2주 이상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부대의견에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50페이지 45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사업인데요, 이게 화재 복구와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대전센터에서 대구센터 내 민간클라우드로 이전된 5개 기관 16개 업무시스템의 2026년도 이용료 그리고 대전센터의 노후 UPS 배터리 교체 및 공주센터의 UPS 배터리 분리 등을 위해서 443억 8600만 원 증액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또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고동진 위원 이거 저……

○소위원장 위성곤 있으신가요?

○고동진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어차피 컨덕팅을 할 거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고동진 위원 이거 방식을 어떻게 하게 돼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어떤 거를……

○고동진 위원 경쟁입찰이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번에 화재가 나 가지고 일부 시스템을 대구에 있는 PPP존이라고 민간클라우드를 이용하니까 올해 예비비에서는 올해 예산까지만 했습니다, 12월 달까지. 그러면 내년도 것이 9월에 났기 때문에 그 이용료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배터리 이거는 이번에 남은 것도 저희가 LG CNS하고 했습니다. 전문업체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사고 나고 보면서 전문 감리업체가 실력이 없는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 설치할 때 경험이지 이설을 해 본 애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한경쟁입찰이라고 그래서……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반드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 필요성 내용 보시면 대구센터 클라우드 이용료가 399억이고요, 배터리 교체는 20억이고 UPS 분리는 23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고동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6번,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사업입니다.

첫 번째 꼭지는 대전센터 내 재해복구시스템이 미구축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스토리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630억 5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두 번째 꼭지, 대전센터 긴급복구를 위해 투입된 전산장비 중에 리스로 도입된 일부 전산장비의 리스료 58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두 가지 다 수용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에서는 이런 복구시스템 할 때 먼진장치를 여기다 부가해서 지진이 났을 때도 안전…… 미세한 지진에도 흔들릴 수 있는 게 서버라는데 여기도 그 시스템이 들어 있나요? 재복구할 때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이달희 위원 다른 데 민간처럼 항구적으로 하자고요. 나중에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라도 담아서……

지금은 안 들어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금 사실은 대전은 아시겠지만 옛날 KT 건물을 20여 년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이달희 위원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서버나 배터리 시스템 자체를 먼진장치를 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는 그게 이미 다 설치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기획관 이상민 공주 백업센터 쪽은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장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대전은 지금 미진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추가검토 해 주세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기획관 이상민 예.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7번 사업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사업인데요.

대전센터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추진을 위해서 ISP 수립, 민간 클라우드에 서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공주센터에 서버 재해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5101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증액 필요 항목의 상세 금액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8번,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인데요.

백본 전송망 회선비와 관련해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후에 늘어날 국가정보통신망 트래픽에 대비해서 회선비 15억 5000만 원이 증액 필요하다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또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정부 측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9번 사업입니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과 정착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법 통과도 됐지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영종구 및 검단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 예산입니다. 청사나 정보통신, 안내표지판 정비 그리고 신청사, 검단구 보건소 건립에 드는 비용입니다. 636억 증액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기재부가 반대의견을 좀 냈었는데요.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이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법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된 다음에 검토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법사위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만……

○**고동진 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본회의 예상하고 있어요?

○**박정현 위원** 27일 날……

○**고동진 위원** 이번 27일?

○**소위원장 위성곤** 법안은 통과되는 거고 그런데 이 지원에 대해서는 기재부는 반대하고 있는 거고.

기재부 반대 논리는 뭐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기본적으로 통합을 할 때는 지원해 주는데요. 이것은 분리거든요. 신설·분리기 때문에 있고 자치사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법사위 위원님들도 ‘아니, 무슨 그런 원칙이 어디 있느냐’……

○**이달희 위원** 일단 쪼개 났으니까 줘야지.

○**소위원장 위성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50번,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세종시에 지방분권의 랜드마크 형식의 종합타운을 조성하려는 취지인데요. 그와 관련된 비용으로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의지 표명을 위해서 상징적인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데요. 용역비 예산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리고 아마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쨌든 재정 당국과 협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넘기고……

○이달희 위원 일단 올려보고.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위원장님 거라서 증액합시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51번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3억 원 신규 반영과 탄소중립 실천 공모대회 개최를 위해서 1억 원 신규, 그래서 총 4억 원 신규 증액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특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특교세만 갖고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해 오긴 했었는데요. 재정 당국과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51번·52번 이것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탄소 감축은 어느 특정 부처만의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지방에서부터 시작돼야만 NDC 감축률을 달성할 수 있을…… 그러니까 기업, 주민, 지자체, 산업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방정부 역할이 큰 거예요.

○서범수 위원 지방정부 역할은 큰데 기후에너지환경부 쪽에 있는 돈도 지방자치단체로 가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일부 가는데 거기는 산업 쪽에 더 많이 있고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후부장관은’ 이렇게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다 손가락 하나 걸치려고 그러는 모양이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지자체 때문에 행안부가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손가락이 아니라 지자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탄소 감축은 불가능해서……

○서범수 위원 그건 잘 아는데…… 아니, 언제부터 행안부만이 지자체를 컨트롤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소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짧게 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같은 건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예산을 위원장 이름으로 많이 해야 되겠네.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저를 좀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56쪽입니다.

56페이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소관입니다.

과거사 부분은 총 23개 내역사업에 대해 증액 의견만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번호도 얘기해 주세요. 53번?

○소위원장 위성곤 번호로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조문상 예, 시작하겠습니다.

56쪽에 연번 53번, 노근리사건 영문 교육자료집 제작 관련입니다.

현 정부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노근리사건 명예회복 관련 영문 교육자료집 제작을 위한 3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고동진 위원님께서 내신 안이어서 모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다음, 57쪽입니다.

54번 사업,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유해봉환 관련입니다.

최근 일본 조세이탄광 유해 발견에 따라 향후 추가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유해발굴 지원과 협력, 유전자 검사 등을 위해 6억 8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과 또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다음 58쪽 연번 55번,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지원 관련입니다.

내역사업인 부마민주항쟁재단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 정부에서 36% 삭감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지원 및 목적에 따른 신규사업 지원을 위해서 5억 7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도 공감은 하는데요. 일부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부마 위원회 출범 1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위원회 업무는 사실 많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보다는 사업비 쪽에 공감하고 또 재정 당국과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일부 수용이면 얼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달희 위원 재단 운영비만 빼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한 2억 정도면 사업비 바람직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지금 여기서 재단 운영비는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만 빼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하지요, 위원님들.

○전문위원 조문상 재단 운영비만 빼고 나머지 부분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그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59쪽, 56번 사업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사료관리 관련입니다.

1987년 이후 국민 기본권운동 기록화 사업, 사료 수집 및 관리, 사료정리서비스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15억 6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의견 없으시지요?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57번, 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에서 민주화운동사업회 소장 사료 기반 연구체계 구축, 민주화운동 사전 편찬, 연구성과 체계화 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 1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은 신중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해서 이런 필요성은 공감하지만요 저희가 봤을 때는 5·18기념재단 내에 유사 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정 당국과의 협의도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신중검토예요, 차관님?

○이달희 위원 아니, 여기가 5·18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아닌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것은 5·18하고 상관이 없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봐서……

○소위원장 위성곤 원안대로 증액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60쪽입니다.

58번 역시 사업회 지원, 업무공간 이전 관련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 M2 6·7층의 업무공간을 이전하고 이를 전시 및 관람객 편의공간으로 제공하여 기념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 14억 4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59번 역시 기념사업회 지원, 시민참여행사 관련입니다.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제3회 민주주의 마라톤 개최, 민주화운동 문화공연 등의 시민참여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박정현 위원 서범수 위원님이 하신 거라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동안 김성희 위원과 서범수 위원이 케미를 맞춰 가지고 이렇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61쪽입니다.

연번 60번, 5·18기념재단 지원 관련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제가 아까 이걸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신중검토 의견 드리는 게, 아까 증액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유사 사업이 있고 또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 5·18기념재단의 26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0% 증가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이것 무슨 신중검토…… 열심히 하셔서 반영하세요. K-콘텐츠는 또 달라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62쪽입니다.

연번 61번 사업, 전라남도 5·18기념공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5·18 민주이념을 계승·기념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서 5·18기념공간 및 커뮤니티센터 조성하기 위한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신중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념 시설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 기념관, 5·18기념공원 등. 그래서 전남에 또 추가하는 부분은 그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재정 당국에서도 신중검토로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신중검토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광주에 있는데 또……

○이달희 위원 광주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목포역 앞이거든요. 이것은 좀……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62번 사업입니다.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 관련입니다.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도 신중검토 의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건축기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서 하자 이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아마 재정 당국도 그런 입장을 줄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끝나면 추경에라도 주는 걸로……

○소위원장 위성곤 이미 용역을 하고 있다는 건 어떤 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광주시에서 5·18묘역을 추모 공간, 역사관, 민주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을 24년부터 26년까지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세워 그 이후에 건축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이 돈이 광주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양부남 위원 그런데 국비로 해 달라는 거지, 지금.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그런데 국비로 반영이 되려면 그런 계획과 이것에 따라서 전체 총사업비가 나오고 그런 기본계획, 실시계획, 이게 얼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양부남 위원 이것 적극 의견을 수용해 보세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이라는 그 메시지가 있어서 이게 나온 예산 요구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러면 부대의견에 연구용역 끝난 후에 추가적인 국비 지원

이런 것을 넣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부남 위원 5·18 현재의 묘지보다도 구묘지가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호남특위에서도 중점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 그냥 수용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수용하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러시지요.

○양부남 위원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부대의견으로 다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달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 끝나고 부대의견 해 가지고 하는 게……

○소위원장 위성곤 부대의견은 국회에서 논의하거든요. 그런데 증액은 논의하지 않습니다, 예산소위에서는.

○양부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증액을 하고 부대의견도 다는 걸로 이렇게……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63쪽입니다.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 관련입니다.

5·18 당시 피를 나누고 생명을 살렸던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역사적 공간 보존 및 5·18 미래세대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7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앞 사안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건축기획 용역이 광주시 자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게 끝나고 나서 예산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양부남 위원 이것도 62번과 똑같은 취지로 부대의견으로 해 주세요.

○소위원장 위성곤 부대의견만 합니까?

○양부남 위원 증액도 하고요.

○소위원장 위성곤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양부남 위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의 차원에서 호남특위에서 발굴한……

○소위원장 위성곤 반대하는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양부남 위원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64번 사업입니다.

3·8민주의거 기념사업지원 관련입니다.

중부권 대표 민주주의 교육 공간인 3·8민주의거기념관 개관에 따라 3·8민주의거 정신

의 계승발전을 위한 3·8아카데미 강좌, 3·8민주의거 주제 공연, 3·8TV 개설 및 운영 등 시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이것은……

○박정현 위원 수용하셔야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이것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검토였는데.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다음, 64쪽입니다.

65번 사업, 민주화운동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체계적 보존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용역사업비 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2억 원 증액이기는 합니다만 신중검토 의견을 드리는 것이요, 지금도 민주화운동 기록물 디지털화 관련 연구용역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정 당국과 협의도 필요하고 중복성이라든지 예산 여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위원님.

○서범수 위원 알았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이걸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66번 사업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 관리 운영 관련입니다.

사업회법과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운영을 위한 시설의 유지보수 및 원형 복원을 위해 15억 4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65페이지, 이걸 트라우마센터 광주와 제주, 66페이지까지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문상 첫 번째, 67번 사업은 광주센터 정원 대비 인건비 부족분과 물가상승비, 운영비 부족분 등을 위해 추가 인력 10명의 인건비 및 사업비 9억 1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66쪽은 제주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6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재정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증액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67쪽, 69번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부산 분원 설치 관련입니다.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부산지역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건 피해 생존자의 트라우마 후유증과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이들의 회복 지원을 위한 부산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을 위해 사업비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전남센터 시범사업 관련해서 1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신중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주하고 제주 같은 경우도 먼저 시범사업을 해 본 다음에 이용실적 같은 것을 해서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정했고요. 부산도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건은 있었습니다만 시범사업을 먼저 해서 어느 정도 이용실적이 나오는지를 보고 센터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같이 다 하시지요.

○고동진 위원 아니, 이것 사업계획이 잡힌 것 아니에요? 아직 안 잡혔어요? 여기 69번, 70번 다 실선 박스 안에 총사업비 얼마, 사업기간,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추가로 각각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위성곤 69번하고 70번을 같이 보시고 의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동진 위원 사업계획이 잡힌 거예요, 안 잡힌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부산은 안 잡혀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여순 이쪽은 이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것은 수용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부산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고동진 위원 부산도 같이 가면 되는 거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렇게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뒤에 보시면 71번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양부남 위원 차관님이 71번하고 69번하고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이광희 위원 69번은 신중검토고 71번은 시범사업이니깐 이걸로……

○양부남 위원 69번은 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것이고 71번은 설립 전에 시범사업 하겠다

는 것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시범사업은 그냥 가고……

○양부남 위원 71번 시범사업은 그냥 가고 69번은……

○박정현 위원 70번도 시범사업이잖아요.

○양부남 위원 예.

○이광희 위원 70·71번은 시범사업.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지금 71번에서 용혜인 위원님, 양부남 위원님 제안하는 부산·경기·전남 시범사업 전부를 하자라는 통합된 의견인 거지요, 사실은. 앞의 69번, 70번은 하나는 부산이고 하나는 전남이고, 그렇지요?

○양부남 위원 69번은 설립하겠다는 거고, 분원을 설치하자.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간에 대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전문위원 조문상 예, 71번 사업이 세 군데 시범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사실은 69번과 70번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고 71번 예산으로 대체하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

○전문위원 조문상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지금 69번과 70번은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하고 71번을 증액하는 걸로 하면 지금 위원님들 의견들이 전부 다 수용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지금 72번 사업도 71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면……

○소위원장 위성곤 72번 사업도 71번에 포함되는 거니까……

○전문위원 조문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라우마 시범사업 6억 원 증액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6억 원은 그냥 그대로 가고 69번도 킬 하고 70번도 킬 하고……

○소위원장 위성곤 예, 72번도 킬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9번부터 72번 사업 중에 71번 사업만 남겨 놓고 나머지 사업은 증액하지 않는 걸로 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69쪽, 73번 사업입니다.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옛 선감학원 일대에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회복 등 역사적·문화적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화위 진상규명 및 과거사 관련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해 사업비 8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신중검토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 내용에 관해서 충분한 검토 및 재정 당국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선감학원의 역사문화공간 조성이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닙니다, 필요한데요. 이것은 경기도 그다음에 이 기념관이 들어서게 될 집 주변의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잘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광희 위원 연구용역이 사전에 안 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고……

○이광희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먼저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지요? 이것 갑자기 이렇게 해서 조성사업으로 가면……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렇지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업은……

○서범수 위원 이게 71번에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위성곤 아닙니다. 이건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트라우마는 피해자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고요.

○고동진 위원 선감학원은 뭐예요?

○이광희 위원 국가폭력으로 어린이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학살을 한 사건이에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국감 때 다……

○고동진 위원 언제 그런 거예요?

○이광희 위원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아니, 일제 때부터.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선감학원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제시대 때 어린이들을 안산에 있는 섬에다가 놓고 학교처럼 하면서 일종의 학도병으로 양성을 하다가 일본이 패망하면서 그게 아동복지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서 한 삼사천 명을 경기도에서 관리했는데 인권탄압과 아이들을 막 일시키고 염전에서 이렇게 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줬거든요.

○이광희 위원 많이 죽고……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래서 학대·구타·성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사건입니다.

○이광희 위원 지방자치단체의 국가폭력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이것은 일단 지방자치단체보고 계획을 만들어서 용역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맞습니다. 저희 계획은 국가 사과가 먼저 선행이 되면서 그것에 따른 후속대책을 지금 경기도라든지 피해자들과 협의해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70쪽입니다.

인건비 관련입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한까지 미처리 사건의 처리를 완료하기 위해서 희생자·유족 사건 처리를 위한 전문인력 5명과 진상규명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4명 등 총 9명의 증원을 위한 인건비 6억 18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위원장으로부터 추가 증액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별지를 보시면……

○소위원장 위성곤 별지를 나눠 주십시오.

○전문위원 조문상 신정훈 위원장으로부터 별지와 같은 추가 증액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운영비와 수집된 자료 내용의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자료 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등 총 16억 23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전문위원님, 인건비랑 그다음에 신정훈 위원장께서 제안한 안이랑 통합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전문위원 조문상 좀 다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른 내용입니까?

○전문위원 조문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먼저 74번 같은 경우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일부 수용 의견 드리겠습니다. 9명 요청하셨는데 9명까지는 아니어도 한 5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제시하신 건 일단 저희는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면,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중에 금액 받으셔서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조문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5명으로 하는 것으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부대의견은 아까 양부남 위원님 것, 부대의견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저희 차관 소관 예산안의 각 항목별 증감은 다 하였고요. 71쪽부터 부대의견은 심사를 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그 부대의견 말씀하시라고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그러면 71쪽, 부대의견 1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사업이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비 지원 방식에 있어 국비 분담 비율을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라는 부대의견을 이달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2번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의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인구의 실질적인 지방 유입·체류를 독려할 수 있도록 개별 청년마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이달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3번 행정안전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및 예산을 행안부로 이관한다.

용혜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아까 심사 과정에서 이광희 위원님께서도 추가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신중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정과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신중한 말씀이고요. 현재……

○서범수 위원 저쪽에서 하는 것 봐 가면서 하자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시범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장관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이 농어촌기본사업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았고 그리고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균형발전에 대한 이해도도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고.

이 사업 자체가 갖는 성격 자체가, 말은 농어촌기본소득이지만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름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는 느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행안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않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서범수 위원 이걸 지금 행안부에서 끌고 오면 또 다른 논쟁거리가 생겨요. 농림축산부에서 하니까 이게 그래도 저렇게 굴러가는 건데, 이걸 행안부로 끌고 오면 진짜 공론화가 돼서 또 다른 논쟁거리가 크게 생긴다고요. 일단 농림축산부에서 하는 걸 봐 가면서, 이걸 우리가 진행을 한번 보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시범사업 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달희 위원 이번에 7개 하니까 하는 것 한번 보시지요, 위원님.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7개 시작하니까 결과를 보고 또……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이걸 반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4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사업 지침에서 현금성 지원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2026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중 소득보장정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집행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라는 것으로 용혜인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5번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지속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위한 운영비가 차질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기금을 배분하여야 하며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장기적인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라는 것으로 위성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지방기금법 개정하고요……

○서범수 위원 농쳤는데 4번의 ‘2026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중 소득보장정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집행’ 이게 무슨 뜻이에요, ‘농어촌기본소득 중’?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게 지방비 매칭분이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농어촌기본소득?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왜 여기에 또 관여가 돼요? 그렇게 되면 농어촌기본소득에 행안부가 같이 개입이 되잖아.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고,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방에 드리는데 이 농어촌기본소득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좀 열악한 데 7개인가를 선정했을 겁니다. 그러면 국비 5 대 5로 매칭하게 되어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라는 것을 용혜인 위원님 입장으로 이해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게 이해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6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의 모든 재원을 이전하여 집행률을 명목상 높이지 않도록 실집행률을 관리하고 기금의 취지에 맞도록 일회성·전시성 사업을 지양하며 정주여건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및 평가기준을 보완한다라는 내용으로 정춘생 위원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기금 평가·배분체계 개선하고요. 실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7번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내 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

연구용 원자로 소재지라는 이유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대안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대전광역시 유성구도 보통교부세를 통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수용 곤란 입장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24년 4월에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 시 부대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였었는데요. 유성구에는 원자력 발전용이 아닌 연구용이었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지 않아서 빠져 있었습니니다.

다만 저희도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 대안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유성구의 별도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로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정부는, 이게 원안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금과 국비가 있기 때문에, 다른 4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큼 받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교부세에서 주게 되면 결국 이걸 또 지방의 돈이라서 반대 의견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수용을 일단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 원자로라고 통칭되어 있기는 하지만 생산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들. 그래서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거고, 지금 행안부가 얘기한 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8번 사항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 교부 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초고령화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또는 학령인구 수가 적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추가적으로 부동산교부세가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견이십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도 조금 수용 곤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담 교부세 교부 기준을 이미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회복지가 더 높고 지역교육이 낮았는데요. 사회복지를 20으로 내리고 저출생을 좀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자체가 조금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는 초고령화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수가 적지만 출산·양육 환경 조정 등을 위해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동산교부세가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정부 측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9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개정 추진 중인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금성 복지지출 운영 및 재정의존성이 높은 사회적연대경제조직 등의 과도한 확대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교부세 배

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 개선 방안을 재검토한다라는 의견 제시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수용 곤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준을 개선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안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는 2026년 보통교부세 교부 기준 개선 방안 적용 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금성 복지지출 운영, 사회연대경제조직 관련 개정 사항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취지를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 정도 수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0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원의 자주재원으로 활용되는 보통교부세 분배 기준 변경이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변경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배분액 변동액을 추계한 시뮬레이션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의견 제시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것도 수용이 좀,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수용이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26년도 것 하려면 23년·24년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6년 교부세는 28년도에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자체가,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부대의견 대안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만전을 기하고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정부 측 의견 받도록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1번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달성 지원을 위하여 특별교부세의 5%를 탄소중립 사업으로 배정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위원장님, 이것도 수용 곤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그대로 하는 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대의견 대안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는 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 분야 보통교부세 보정수요를 보장하는 등—특별교부세가 아니고요—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달성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저희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보통교부세 보정수요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보면 현안특교가 있고 재난특교가 있고 시책특교가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시책특교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 시책특교의 일부에 포함시킬 수 있게끔, 그건 특별교부세명을 넣어야 되니까 보통교부세 보정 기준이라는 것은 그 독려를 위해서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

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해서 돈도 좀 줘야 되니까 돈 더 주는 것은 특별교부세에 그 부분을 포함시키는 걸로 내용을 좀 변경해서 수정 제안을 드리는데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위원장님, 저희가 시책사업은 특교로 우수 이런 데 지원을 지금, 아까도 2개인가 있었어요. 또 이번에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리고 현안특교에도 필요하면 반영을 좀 할 수 있게끔 지자체에 권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용어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한번 살펴보고 꼭 부대의견에 안 있어도 그건 제가 책임지고 그런 사업을 일정 부분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고맙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2번입니다.

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 자치단체교부금,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지방자치단체융자금사업 중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해당 사업들의 효과 및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지방소멸대응인지 예산 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라는 의견 제시건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저희가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수용 의견을 드리고요. 무슨 뜻이냐면 지방소멸대응인지 예산 제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현재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좀 바꿔 주셨으면 해서 부대의견 대안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주요 사업 추진 시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3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여건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교부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상향 등의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한다라는 의견 제시건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다음, 14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추진 시 지자체가 정부 지원기준 할인을 초과하여 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재정여력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지방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의견 제시건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이 부분은 현재도 저희가 안이 마련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족도 수준의 차이라고 봐서 일단은 수용곤란 의견을 드리고요.

부대의견 대안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해 주시면 취지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5번,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지역사랑상품권 참여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라는 의견 제시건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수용하고.

다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마지막으로 16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민생소비쿠폰 등의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라는 의견 제시건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취지에 공감하면서 일부수용인데요. 왜냐하면 민생소비쿠폰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 주셨으면 합니다. 대안으로는……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마지막, 과거사 부분입니다. 17번 사항으로 별지 제공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과 옛 광주적십자 병원보존 및 활용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반영하여 국비를 지원한다라는 의견 제시건입니다. 이것도 아까 예산사업에서……

○**소위원장 위성곤** 아까 양부남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이고.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예.

○**양부남 위원**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선감학원 관련된 부대의견도 저는……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만요. 위원님, 이거 하던 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우선.

부대의견.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과 옛 광주적십자 병원보존 및 활용사업에 대한 연구용역결과를 하여 국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연구용역을 하라고 했더니 국비 지원까지 들어왔네요.

○**양부남 위원** 아니, 국비를 아까 지원하기로 했는데?

○**고동진 위원** 검토한다고 그래요.

○**양부남 위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박정현 위원** ‘검토한다’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검토한다’로 하시지요.

○**이광희 위원** 그리고 아까 선감학원 옛터 8억 7000만 원 삭감하면서 이거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이거를 연구용역으로 이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광희 위원**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아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걸로 부대의견을 좀 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달희 위원** 그거는 지방정부에서 해야지. 지자체에서 해야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거는 경기도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연구용역은 다 광주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소위원장 위성곤** 제가 세 가지만 부대의견으로 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지역사랑화폐 관련해서 블록체인 기반 순환형 지역화폐를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라는 조항 하나랑. 두 번째, 경찰의 수사 능력 향상이 매우 중요한데 그게 검토 잘 되고…… 경찰이라고 하는데 경찰은 빼고.

하나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제주인 경우는 의회가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더라고요. 이건 의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넘어서서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대의견. ‘행안부는 점검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부대의견을 달고 싶은데 정부 측 의견은?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거는 위원장님, 그런데 약간 일단 정부예산하고 상관이 없지 않나 싶어서……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걸 뒤서 지방의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행위거든요, 제가 볼 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을 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그거는 위원님, 부대의견보다는 저희가 한번 현황을 좀 파악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고 개선 방안을 좀 저희가 별도로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야, 부대의견을 달아야 이 일이 되고 근거가 돼서, 지방의회나 지방정부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관련된 사항을 좀 점검해서 나중에 최종 의결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예, 그건 이따 한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오늘 보류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오늘 의결했는데요. 감사하고요.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안부차관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팬썰습니까?

○**이광희 위원** 보류된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위원장 위성곤** 보류된 건 나중에.

일단 행안부차관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김민재** 감사합니다.

○**양부남 위원** 어제 제가 없을 때 제가 의견을 냈던 5번,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아마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 가지고……

○**소위원장 위성곤** 여러 가지를 결론을 못 낸 게 있는데요. 그 보류한 건은 나중에.

○양부남 위원 그때 같이 할까요? 그럼시다.

○소위원장 위성곤 김민재 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하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1시예요.

○이광희 위원 11시 17분이에요, 지금.

○양부남 위원 아니, 오늘 집에 안 갈 겁니까? 점심 먹지 말고 하자니까요.

○소위원장 위성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12시인 줄, 12시 20분인 줄 알고……

○양부남 위원 1시 반에 합시다.

○박정현 위원 그래도 되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지금 심의하러 오셨는데……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난안전본부장입니다.

항상 업무 잘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들도 업무에 잘 반영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전문위원님 1번 사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재난안전본부 관련해서 내역사업 20개가 들어왔고요. 8개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모두 증액 의견입니다.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최초에 보내 드렸던 자료에서 6번 사항이 지금 10번 사항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차업이 원래 6번이었는데요. 저희가 사업 주소를 조금 조정하면서……

○소위원장 위성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고동진 위원 페이지, 몇 항.

○전문위원 나아정 새로 받으신 것……

○박정현 위원 어제 준 거 말고 오늘 준 걸로 보라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맞습니다.

○양부남 위원 오늘 준 게 있어요?

○박정현 위원 예, 오늘 따로 췌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오늘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냥, 말씀하지 마시고 진행하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예방정책실입니다.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 운영 세부사업 중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내역사업 내에 대체 건조 지원 규모를 연 1척 수준에서 연 최대 3척까지 확대하기 위한 1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저희는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재난안전산업활성화 세부사업입니다.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신규) 내역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동의하고 법안도 좀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3번,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에 사업 대상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 드론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제공을 위한 예산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여기 정부 측 의견 얘기하기 전에 자료 제가 이거 작성을 잘못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아니라 20억 증액으로 해 뒀었는데 이 자료가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누가 잘못했나. 전문위원이 잘못된 거야 아니면 보좌관이 잘못된 거야.

○고동진 위원 전문위원이 또 잘못했다고 그러면 미안하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만. 그러면 정부 측 의견 하기 전에 증액 금액이 20억이라는……

○고동진 위원 예, 제가 잘못 올린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거는 상황실 연계시스템과 교육 관련된 예산인데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국민안전의식선진화 세부사업입니다.

충청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저희들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 아니, 안전체험관 1억이요? 뭐 하는……

○**이달희 위원** 기본계획 수립비입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기본계획 수립비 1억 원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승강기안전관리개선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에 안전 취약요소 점검 및 모니터링 감지장치 설치를 위한 48억 4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거와 관련해서는 앞에 30억 원 실태조사는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뒤에 시스템 부분은 실태조사 이후에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0억 정도만 증액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의 30억 수정 요청에 대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3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역량 강화 내역사업 중 거점별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현장교육 및 합동훈련 소요 비용, 교육콘텐츠 제작 비용 18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 부분도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시흥시만 왜 해요, 그런데? 정부 측, 왜 시흥시만 하나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어떤……

○**박정현 위원** 아니, 지금 다른 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통신망 얘기입니다.

○**박정현 위원** 새로운 자료로 보세요.

○**전문위원 나아정**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6번 재난전광판이…… 죄송합니다.

○**고동진 위원** 자료가 바뀌었어요.

○**전문위원 나아정** 10번 사업입니다, 그 시흥시는.

○**소위원장 위성곤** 예.

○**전문위원 나아정** 7번입니다.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세부사업 내에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34억 61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의견 없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자연재난실 소관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세부사업 내에 주민대피지원단운영(신규) 사업을 위하여 주민대피지원단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한 18억 15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질문 있어서, 주민대피지원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지역별로 운영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이런 것을 확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비를 한 50% 정도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각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자율방재단이라고 있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이것하고 무슨……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거는 실제로 주민을 대피시키는 활동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만약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을 대피시키는 활동을 실제로 했을 경우에 그분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냥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용하면 안 되나요? 이걸 또 뭐 새로 구성해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박정현 위원 구성하는 건 아니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느 마을에는 자율방재단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이 활동하실 수도 있고 다 마을별로, 그러니까 산불이든 이런 게 났을 때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이 그 마을에 있는, 저희는 주로 이장님들이 많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소위원장 위성곤 본부장님, 그러니까 주민대피지원단 그 단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재단원도 될 수 있고, 이장님들도 될 수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되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경북이나 이런 데 보면 이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운영회장, 청년회장 이런 분들이……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단이 따로 구성되는 건 아니네요?

○이달희 위원 아니지요. 활동하고 받아가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활동하고 받아가는 건데 경북도 같으면 자기가 별도로 대피단 이런 식으로 이름은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민을 대피하는 활동을 한 번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5만 원 정도, 대피시켰다가 모셔다 드리

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좀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활동보상비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단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사전에 만들어진 것 아니고 그러면……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다만 이 취약계층을 만약에 비가 오면 누가 옮길 거냐, 누가 대피를 시킬 거냐는 지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비가 오는데 그때 가서 누가 대피시킬 거냐를 결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여기 취약계층분, 노인분이 계시는데 이분을 경로당으로 대피시키는 것은 이장님께서 해 주신다 그러면 그 이장님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재난 수해나 산불이나 피해를 대비해서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 수해가 났을 때 노인 어떤 어떤 집은 누가 빨리 대피시킨다 이 시스템으로 매뉴얼로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4시간도 가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돈을 좀 주자는 활동비 같습니다. 맞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이러한 업무를 사실상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봉사단이 수행해 왔어요. 현재 자율방재단·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지금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냥 봉사활동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인 어떤, 아까……

○이달희 위원 아니요. 의용소방대 돈 나갑니다.

○서범수 위원 의용소방대는 나가는데 방재단은 나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자율방재단은 없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래서 자율방재단이 실제로 이런 업무를 수행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박정현 위원 그건 알 수 없어요.

○양부남 위원 그런데 그러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수당을……

○이달희 위원 자율방재단이 이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잠깐만요. 자율……

제가 이 취지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자율방재단도 이런 업무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자율방재단은 이런 업무 수행을 안 하겠네. 돈도 안 주는데 뭐 자기네 해 봤자…… 그런 형평성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형평성.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자율방재단도 내가 볼 때는 이런 일을 해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안 하겠지, 나는 돈도 안 주는데 하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답변드릴까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금 자율방재단이든 통·이장님들이든 돈도 안 받으시고도 활동하신 사례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는 것은 좀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책임을 주고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축하자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는 돈을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사의 차원에서 예방 순찰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이런 걸 했던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대피활동에 대해서, 대피활동은 인명피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하고 저도 동의가 되는데 이거를 현장에서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대피지원단을 따로 이렇게 구성을 아예 하면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율방제단도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좀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통장 중심으로 한다든가 어떤 특정한 지역은 자율방제단을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조금 규정이 돼야지 안 그러면 이게 운영하기가 나중에 좀 어려울 겁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데가 경북이라든지 이런……

○이달희 위원 제가 현장의 얘기를 조금 드리면요. 어느 마을은 자율방제단의 활동하는 분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어느 마을은 청년회장이 또 가까워서 들어갈 수 있고, 어느 마을은 이장이 들어갈 수 있고 그 지역에 가면 좀 젊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다 뽑혀서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서범수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역자율방제단은 이게 잘 못하면 해체가 돼 버려요, 방제단이. 안 그렇습니까?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해서 돈을 좀 더 주든지 수당을 주면 되는데 이게 지금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다시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할 때 자율방제단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통·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이 활동을 하는 분들로 지정이 되시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마을에는 자율방제단이 없고 지금 잘 아시지만 마을 단위별로 보면 읍면 단위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마을 단위로 갔을 때는 거기에 자율방제단도 없고 의용소방대도 없고 남아 있는 분은 이장님밖에 없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율방제단이 있는 데는 자율 방제단을 활용하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단원들을 하고 없으면 또 통·이장……

○서범수 위원 활용하는 거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렇게 정해 주시면 저도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이것 하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집중호우라는 게 농촌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심 안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그래서 지금 이 산출 기초를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인명피해 우려지역이라는 거를 한 9000개소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가 올 때라든지 눈이 많이 왔을 때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생각해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1400여 개소가 지금 긴급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실비 보상 성격으로 해 주자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 돈이 안 쓰이기를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들도 이거는 사전적으로 월급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대피활동을 실제로 하셨을 때 그거에 대한 실비 보상 차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견들은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정책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재난관리평가지원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에 우수기관 포상금 내역사업에 우수기관 훈격별 포상금을 100%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4억 92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저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10번 사업입니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세부사업 내에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사업을 위하여 시흥시 재난 예·경보 구축시스템 추가 구축을 위한 6억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 하상도로 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어떤 사업이랑요? 하상도로?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은 사업명에서 보시다시피 차단시설, 하상도로에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CCTV를 설치하고, 물론 그 안에 재해문자전광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재해문자전광판만 설치하는 사업이라서 하상도로 사업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예산은 아니고 재난특

교나 이런 걸로 사업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재난특교 요청하면 준대요,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그러면 꼭 챙겨 주십시오.

○소위원장 위성곤 예, 그러면 이거는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자연재난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내역사업입니다.

용인 등 계속 사업지구 18개와 신규 사업지구 8개소 등의 정비에 필요한 400억 4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계속 사업지구 18개하고 신규 사업지구 8개소가 있는데 그 규모를 각각 특정하지 않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별표에서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지역과 겹치는 지역이 8개소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예산을 2개를 다 반영하게 되면 8개소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사업 예산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8개소를 제외하고 계속사업 15개소와 신규사업 3개소에 대해서 307억 8900만 원을 반영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제한된 지구에 예산을 반영하는 식으로 증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재해위험지역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뭐 괜찮은데 지구가 미지정돼 있는 것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지구가 미지정돼 있는 부분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의정부 녹양사거리 일원 상습침수로 개선사업 이게 돼 있는데 지구가 미지정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0쪽의 맨 마지막에 광주 소촌산단 일원 여기도 지구가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쪽에 광주 광산구 재난관리시설 노후화 이 부분도 지구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사업은 지구 지정을 내년에는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양부남 위원 광주 소촌동하고……

○소위원장 위성곤 광주 소촌동하고 광주 동곡동.

○박정현 위원 또 하나가 어디예요?

○전문위원 나아정 광산구 의정부 녹양사거리.

○양부남 위원 여기가 뭐가 안 돼서 안 되나?

○소위원장 위성곤 지구 지정.

광산구도 안 된 거 아니예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제가 세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맨 마지막에 있는 의정부 녹양사거리가 지구 지정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10쪽의 맨 마지막에 있는 광주 소촌산단 이 부분도 지구 지정이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11쪽에 두 번째 있는 광주 광산구 재난관리시설 노후화 이 부분도 지구 지정이 안 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 지역을 제외하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중복된 걸 제외하고 해서 증액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부남 위원 잠깐, 광주 동곡동은 지구 지정이 돼 있나?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거기는 돼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위성곤 반영을 하고, 됐지요?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내역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보은 산대 1억 원, 보은 어은 1억 원, 괴산 주진N2지구 3억 원.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다 안 해도 좋으니까요.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하십시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저희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에서 동의했습니다. 증액하는 걸로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계속사업 6개 지구하고 신규사업 7개 지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20억 2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는데요. 마찬가지로 중복 사업이 세 곳에 있어서 이 금액을 제외한 93억 2400만 원을 반영하시고 나머지는 개별 사업 금액으로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그것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사회재난실 일반회계 사업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내역사업 피해지원 사업 내에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인터넷 소통창구를 누리집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작비 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저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추모사업입니다.

추모사업 내역사업 내에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증액……

○**고동진 위원** 아니, 이것 잠깐만.

이게 이태원 사고, 저도 그 당시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정부 주도로 갈 겁니까? 돈 이렇게 쓰는 것 맞아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에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고동진 위원** 물론 이런 것 반대하면 민주당에 그냥 아주 조리돌림 당할 테니까 뭐 이해는 하는데…… 나는 그래서 지금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 여기다가 돈 계속 쓸 거냐 이거지.

○**이광희 위원** 쓰면 안 돼요?

○**고동진 위원** 좀 적당히 해야지.

○**박정현 위원** 그리고 이태원 참사는 지금 조사 과정에 있어요, 또.

○**고동진 위원**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는 걸로 하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재난복구지원국 소관입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 세부사업 내 재난경험자 심리회복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에 참사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한 예산 51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AI 기반 재난심리회복지원 플랫폼 구축 ISP 수립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 부분도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비상대비정책국 소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세부사업 내 민방위피해지원 대책비 내역사업 내용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 지원금액에 국고보조율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기 위한 71억 26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장기간 수면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거고 또 군소음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향해야 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너무 많이 올려 줬을 때는 군소음피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민방위법상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금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률에 돼 있습니다. 지금 국고보조비율이 70 대 30으로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국고보조율을 얼마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70%잖아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예.

○박정현 위원 그냥 그 선에서 유지한다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조금 올려 주신다면, 이게 너무 적을 수 있습니다만 보통 보조율은 많이 높여도 80 대 20 이 정도니까 한 80% 정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접경지역 소음피해를 입은 것은 국가가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입니까?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장님 말씀 동의를 하고요.

다만 거기 보면 관련 법률이 최근에 통과가 됐는데 그 피해지원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도록 관련 법률이 정해졌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지원하더라도 결국은 국가의 몫이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잖아요. 결국 국가가 평화를 잘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되는 거지 평화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00%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0%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신규 세부사업 제안내용입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사업입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구성하는 지원조직의 운영예산 14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지원조직의 운영예산이 없었어요?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얼마 전에 산불 관련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지원단을 만들라고 해서,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7·15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피해자지원단을 운영하고 추모사업 관련 유가족 요청사항 지원을 위한 1억 85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이것도 최근에 생겼는데 저희가 운영비를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지요.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부대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재난대책비 예산과 전년도 복구비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저희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쓰이는 것과 올해 신규로 쓰일 부분을 잘 드러나도록 예산 편성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재난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추후 차관 소관을 포함하여 하겠습니다.

재난본부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선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찰청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재성 차장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찰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드리고 향후 경찰행정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일반사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경찰청 소관 심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초에 보내 드렸던 소위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세부사업 큰 카테고리로는 그대로 두고 안의 내역사업을 조금 조정하고 정리하면서 내역사업의 순위하고

제목이 조금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청은 내역사업 기준으로 모두 35개 사업이고 8개 사업에 대한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5개의 신규사업, 부대의견 3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획조정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기획조정활동의 내역사업에 관례 법률 생성형 AI 검색시스템 이용권 구매를 위한 신규사업 예산 15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AI가 활용이 되면 업무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는 아시지요? 엘박스를 무료로 사용했었는데요. 이 구독료가 필요해서 올리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동진 위원 위원장 보고서는 그냥 ‘예’.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위원장보다 이 내용이 더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도 좋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경무인사기획관 소관 사업입니다.

경찰복지증진 세부사업 내의 경찰관 의료지원 내역사업에서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검진을 추가하기 위한 22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로 26년의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항목 예산은 107억 9000만 원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증액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3번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내역사업입니다.

마음동행센터 5개소 증설을 위한 14억 55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로 25년에 마음동행센터가 18개소에 상담사는 38명이었는데 26년에 1개소, 1명이 증가해서 19개소, 39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5개소 그리고 각 개소당 3명씩 증가시킨 14억 5500만 원이 증액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4번 아산경찰병원 건립입니다.

단일 세부사업인데요. 아산경찰병원 의료·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참고로 26년에는 아산경찰병원 건립과 관련하여 설계비만 30억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잠시만, 잠시만요.

이게 아산경찰병원 의료·운영계획 수립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기존에 없는 것도 아니고 경찰병원이 있잖아, 서울에.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서범수 위원 그걸 조금 참고하면 되지 그걸 다시 의료·운영계획 수립한다고 4억 원이나 증액을 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경찰병원을 운영하면 그 운영 수익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또 따져 봐야 되는데……

○서범수 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경찰병원이 있거든, 서울에. 그걸 모델로 삼아서 하면 되지 그걸 또 따라가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런데 서울하고 그 지역하고는 수요자들이나 이런 층이 좀 다를 수가 있어서 저희는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좀 특화해서 거기에서 조금 수요를 창출하려고, 수입을 좀 내려고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서범수 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런 것 용역 필요해요, 사실? 결국은……

○경찰청차장 유재성 이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저희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시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서범수 위원 알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다른 병원에서도 그런 용역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알았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요새 좋은 LLM들 많아서 잘 활용하면 운영계획 수립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결국은 현장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할 텐데 현장의 의견을 잘 들어서 운영계획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국제협력관실 소관 사업입니다.

해외 치안협력 강화 세부사업 내의 해외 주요 사건 공조수사 활동 내역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내내역사업에 대한 의견이 4건 제출되었는데요.

첫 번째 내내역사업인 보이스포싱 등 해외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 증액 의견입니다. 이 예산은 첩보검증 출장비, 잠복수사관 동원비용, 차량비용 그다음에 네트워크 구축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용해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출장과 잠복수사관 동원경비만 2배 증액시키고 이상식 위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업을 2배씩 증액시키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내역사업인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의 도피사범 집중 검거·송환을 위한 출장비 증액 의견입니다. 현재는 26년에 105회를 기준으로 출장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상식 위원 같은 경우에는 15회를 증가시키고 용해인 위원 같은 경우에는 125회를 증가시켜서 각각 120회, 225회를 만드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1억 4800만 원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 밑에는 아니고요?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인 경우는 동의하지 않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은 5000만 원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차장님, 우리 형사들이 가서 잠복을 해요? 무슨 수사권이 있기에 잠복을 해요? ‘잠복수사관 동원’ 이거거든. 밖에 나가면 우리한테 수사권이 있나요? 대한민국 형사들한테 수사권이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수사권은 없지만……

○서범수 위원 수사권이 없지요. 잡을 수도 없고 수사권도 없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지금 이것 해외 범죄조직 검거작전인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재영 국제협력관입니다.

현지에 가면 물론 저희 주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현지 경찰을 동원한다거나 차량을 임차한다거나 또는 현지 첩보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도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필요했고 거기 따라서 기존에 이상식 위원님은……

○서범수 위원 그런 비용은 내가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용어 자체가 잠복 어떻게 이게 지금 꼭 우리 형사들이 나가 가지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고 잠복해서 잡는다는 그런 개념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내 이야기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재영 그런데 이게 작전에 필요한 차량을 임차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잠복해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재영 저희들이 잠복하는 건 아닙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잠복수사관 동원 3600만 원 어떻게 쓰실 거예요? 지금 서범수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이거든요, 잠복수사관 동원 3600만 원 어디에 쓸 거냐.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재영 현지 수사관들 동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현지 동원할 때 비용을 지불합니까?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재영 그렇습니다. 그 나라 수사관들……

○서범수 위원 무슨 말씀이 그래요? 그러면 그 나라 형사한테 ‘가자, 가자, 우리가 돈 대 줄 테니까 가자’ 이럴 거예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재영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작전을 할 때 그냥 작전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에 잘 협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협조 비용을 좀 지불해야 되는구나.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재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전을 할 때 필요한 차량이라든가 그리고 동원비 등을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수료를 약간 내는 형태로 해서 협조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재영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내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갈게요.

○소위원장 위성곤 아까 정부 측 의견대로 반영하여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껴서 써 주세요.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해외치안 협력 강화 세부사업 내에 있는 또 다른 내역사업입니다.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 경찰주재관 11명, 경찰협력관 12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 13억 8500만 원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대행님, 여러 주재관들 중에서 경찰주재관이 체재비나 이런 게 가장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다른 부처들도 주재관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달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부분도 반영이 됐나요? 그래도 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많이 필요한데 체재비 자체가, 다른 부처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가 보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 저희가 다른 부처의 주재관들과 비교해서 이걸 하지는 않았고……

○이달희 위원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것까지는 저희가 감안한 건 아니고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만 주재관·협력관……

○이달희 위원 그런데 보내는 건 좋은데 체재비나 주재비를 너무 적게 주면 활동 폭이 줄어들잖아요. 활동할 수 있을 만큼은, 증액을 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요, 이런 항목일수록.

○**경찰청차장 유재성** 지금 타 부처와 동일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달희 위원** 동일했나요, 이번에는? 그동안은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주재관은 외교부 TO로 해서 가는 인원이고 저희는 별도로 협력관 개념으로 파견 형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열악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협력관, 나가시는 분들 대접을, 대우를 잘해라 이거지요. 주재관은 어차피 외교부에서 가기 때문에 비슷할 거고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주재관 11명 어디 어디 느는 거예요? 늘릴 예정입니까, 늘릴 예정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니,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명.

○**서범수 위원** 그런데 협의를, 확정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태워요?

○**이달희 위원** 경찰주재관은 원래 있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기재부 협의 완료한 게 5명이고 행안부하고 지금 협의 중인 게 6명이고,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것 확정은 안 됐네. 그러면 5명만 확정이 된 것으로 봐야 되네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거의 될 것으로……

○**서범수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소위원장 위성곤** 보고자료에 의하면 경찰주재관 11명 증원 예정이고 동남아권은 반영이 완료됐다고 얘기를 써 놔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주재관 11명, 경찰협력관 12명은 증원 예정이라는 거지요? 예정에 맞춰서 필요한 경비라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답변하십시오.

○**경찰청국제협력관 이재영** 국제협력관입니다.

총 11개의 직위가 지금 협의를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5개가 아니라 6개 직위는 이미 기재부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5개 직위는 지금 행안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조만간 된다고 일단 구두상으로는 저희들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서면은 받지 못했지만 구두상으로는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증액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네트워크 강화 내역사업에는 세 가지 증액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 동남아 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을 위한 4억 18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여기에는 국외여비, 용역비, 작전수행비, 자산취득비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인터폴 편당을 위한 10억 9200만 원 증액의견인데요. 편당을 9억 6000만 원 하고 국제회의 비용이 1억 3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 편당을 위한 24억 9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3건 모두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건 다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달희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은 미래치안정책국 소관입니다.

경찰 기동력 강화 세부사업 내에 증차 내역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찰차 증차 110대를 전액 삭감하는, 41억 8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이게 뭐예요? 그러면 작년에 기순대 운영한다고 해서 순찰차 증차된 걸 전부 기순대로 돌린 겁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이것은 기순대 운영하는 차량을, 기순대를 전면 폐지하고 이 차량으로, 증차하지 말고 이것을 써라, 순찰차 대응으로 써라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기순대 차량은 스타렉스 차량인데 이게 순찰차량하고는 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또 저희가 기순대를 전면 폐지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역경찰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동순찰대를 한 55% 감축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순대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당분간 인력을 감축하고 효율화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차량 증차 예산은 정부 원안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기순대 운영 차량 140대가 있는 거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박정현 위원 절반 정도를 운영한다 그러면 차량도 절반 정도로 낮춰지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은 담당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입니다.

현재 160여 대 정도가 남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50% 정도 인력 운영을 기순대를 했을 때를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60대 중에 이 부분을 지금 예산을 삭감하시게 되면……

실은 현장에 있는 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삭감 말고 50% 줄인다고 했는데 그 남는 차량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그것에만 답변하세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사고조사 차량이라고 해서 402대가 있는데 이 중에 한 30% 정도가 내용연수 7년을 경과한, 현장에서 굉장히 쓰기 어려운 정도의 형편의 낡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교통사고 조사……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교통사고 조사하고 과학수사 차량도 지금 총 330대 중의 30% 정도가 노후 차량입니다. 이런 경우로 대체를 해서 하면 현장의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저는 하여튼 위원장님 기순대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기순대 운영은 해야 된다고 봐요. 단지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꾸 지구대나 파출소 직원들이 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저렇게 하느냐, 우리한테 와야 될 인력을 왜 기순대로 몰아서 가느냐, 그래서 우리 인력이 없다라고 자꾸 불평불만이 많은데 분명하게 역할 분담을 시키자고요. 기순대는 기순대의 업무가 있잖아요, 처음에 만들 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지구대, 파출소 업무하듯이 기순대를 운영하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기순대가 제가 생활안전국장 할 때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르마를 잘 타 줘야 된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기순대를 지역경찰하고 차별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역경찰은 주로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동을 하고 그래서 평상시 도보 순찰이라든지 순찰 활동에는 많이 할애를 못 합니다. 그래서 기동순찰대가 도보 순찰도 하고 관계성 범죄 이런 범죄가 많이 생기는, 우려되는 관계성 범죄의 우려자, 고위험자 중심으로 주변에 활동도 하고 또 미성년자 약취유인 같은 사건이 빈발한다 그러면 그쪽에 집중적으로 배치도 하고 또 요즘에 관광객들이 늘어나서 관광객 치안이 불안하다, 그런 지역에 있으면 그런 지역에도 투입을 하고 그래서 경계를 좀 이렇게 어느 지역에 한정돼 있지 않고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비대 경력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의 기순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지역경찰과 잘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역할을 명확히 해서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국감 질의 과정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서 중언부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앞서 얘기했는데 관계성 범죄를 하는 데에 기순대가 필요하다는 논리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류했다가 의논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 계획을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니까 중심지역관서제 앞으로 그대로 해 나갈 건지.

결국은 기순대로, 사실은 중심지역관서제와 공동체관서제를 하면서 공동체관서제에 1명씩 두고 실질적으로 공동체관서에 1명 있다 보니까 마을 간의 유대관계가 모두 끊어졌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계성 범죄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는데 그것의 문제와 그다음에 기동순찰대의 문제를 종합해서 정리해서 이거 마무리될 때까지 의견을 주시면 위원님들

과 의논해 보겠습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장비관리유지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9번, 장비관리운영 내역사업은 저위험탄 구입 예산 77억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도 경찰청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저위험권총을 많이 사용하는 게 오히려 이러한 치안 현장에서 범인 검거 과정에서 불의의 어떤 살상, 인명을 살상하는 일이 더 적게 일어난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게 합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유지해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저는 양부남 위원님에 동의를 하지만 용해인 위원님의 문제의식은 인체 관통용 저위험권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위성곤 저위험총알이지만 인체를 관통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권총의 성능과 내용에 대해서. 담당 국장이 설명……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담당 국장이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체를 관통하는데 저희가 기존의 38권총보다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총알에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배경은 허벅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통상 경찰관들은 허벅지를 중심으로 많이 사격을 하게 되는데요, 신체부위 중에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그러면 피부를 뚫고 6cm 정도 미만까지가 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퇴골을 닿지 않는 정도 수준이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관통형, 압축 스펀지탄이라든지 고무탄이라든지 우리 국내에도 해경에서 사용한 바 있고 외국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38권총의 10분의 1인 이 저위험권총보다 한 5배 정도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해경에서 중국인 대상으로 해양 침입을 한 사례에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스펀지탄이 가슴 부위를 맞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탄이라 하더라도 그게 절대 위력이 약하지 않다는 게 외국 사례, 방금 국내 사례와 또 외국 사례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영국도 한 2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고무탄을 맞고 사망한 사람이 한 53명 정도 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저위험총은 처음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만든 그런

제품이 되겠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반신 같은 경우에 맞았을 때는 장기 쪽에 좀 치명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절대 저위험충이라고 해서 다른 약화된 기준이 아니라 38권총과 동일하게 철저한 교육과 철저한 훈련 그리고 철저한 조건하에, 법령이나 매뉴얼상에 철저한 조건을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 38권총의 강력한 위력으로 인한 높은 살상력을 조금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관련 내용을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밑에 거까지?

○전문위원 나아정 예, 밑에 저위험권총 구입 예산 136억 89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같이 들어왔고요. 또 마지막 페이지, 24페이지 부대의견 1번을 보시면 이거와 관련해서 경찰청은 인체 관통용 저위험 권총 보급 사업 자체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신뢰성이 담보된 안전성 기준을 재정립하고 안전성 검사를 다시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견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종합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옛날에 22가 있었잖아요, 22권총, 이십이.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형사들이 잠깐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거하고 다릅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다릅니다.

○서범수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때처럼 이거 실컷 만들어 놓고 또 22권총처럼 안 사용……

○경찰청차장 유재성 22는 그때 총알이 좀 걸리는 그런 게 있어서, 탄창에다가 넣어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22는 지금 쓰지는 않습니다.

○서범수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컷 만들어 놓고……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래서 저희가 이게 16년부터 4년 동안 R&D를 했고 R&D 끝난 다음에 성능 검사라든지 안전성 검사를 그동안 4년에 걸쳐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활용할 때는 훈련용으로 우선 활용을 해서 성능이라든지 안전성 이런 부분을 더 계속 검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결국은 살상이 가능한 거잖아요. 아까 국장이 고무탄이 전 세계에서 50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총으로 몇 명이 죽었는지는 얘기는 안 하고 고무탄을 비판하기 위해서 끌어다 댄 논리인데 결국은 38구경총보다는 낮지만 살상이, 몸이나 흉부나 이런 데 맞으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것도 급소에 맞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기준이라든지……

○소위원장 위성곤 그것보다 안전한 거는 고무탄이다 이렇게 용혜인 위원은 주장하는 거고 그 주장의 지점이 다른 지점인데, 하나만 좀 사실관계를 확인할게요.

이거를 개발을 경찰청이 업체에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청이 개발한 겁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R&D로 해서 이게 개발이 된 겁니다.

○박정현 위원 자체에서 개발……

○고동진 위원 누가 개발했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국장이 대신 답변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방위사업청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R&D를 해서 만든 4년 동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거 검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보고받기로는 아까 허벅지로만 하면 관통도 안 되고 어쨌든 38보다는 훨씬 안전성은 검증됐다 그제 현재까지 답 아니었어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어디 급소 맞거나 그러면 고무탄이라도 위험한 거고.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이 예산을 살려 달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능 측면에서 이제는 시범적으로 써도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까?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아까 말씀하셨던……

○고동진 위원 아니, 간단하게. 결론 내렸어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그렇습니다. 38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8보다 위력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고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우리가 반대를 할 이유가 뭐예요?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급소를 때리면 돌 던져서도 죽어요.

○고동진 위원 그럼요.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급소를 쏘느냐 안 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안전, 허벅지, 대퇴부 이하로 쏜다는 안전 조건이 준수됐을 때 고무탄과 이걸 비교해서도 확실히 이게 살상력이 더 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동진 위원 전제가 된 거예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고무탄과는 지금 수평적으로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고동진 위원 아니, 38 대비.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38 대비는 확실히 10분의 1 수준입니다.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양부남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인용 안 해 주면 38을 쓰니까 그러면 더 살상력이 높아지잖아요.

○고동진 위원 아니, 이거는 왜 우리가……

○소위원장 위성곤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인데, 지금까지는 연구였지만. 지금은 38구경을 대체하는 이유는 38구경이 인명 살상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거고 그 대안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저위험탄과 그다음에 고무탄인데 지금 현재 고무탄은 보급돼 있습니까?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아닙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한다면 고무탄을 할 거냐 저위험탄을 할 거냐라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용혜인 위원님은.

○고동진 위원 아니, 저위험 이것도 총알은 플라스틱 아니에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플라스틱탄환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플라스틱탄환인데 관통을 한다는 거예요.

○고동진 위원 아니, 관통은 못 해요.

○이달희 위원 관통 아니고 6cm……

○고동진 위원 아니, 7cm까지……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관통을 한다고 답변하잖아요.

○고동진 위원 아니, 아까 허벅지 이하로……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그 부분은 피부를 6cm까지 뚫고 나간다 그 취지로……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관통의 차이가 밖으로 빠져나가냐 중간에 머무냐 이 차이……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 허벅지를 기준으로 38구경에 총을 맞아도 죽지 않고 위험탄을 막아도 죽지 않고 고무탄환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허벅지만 가격한다면. 그런데 왜 38구경의 총을 저위험탄이나 고무탄으로 고민하냐면 다른 부위에 맞았을 때 사망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38구경은 그걸 낮추기 위해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은 그동안 다른 외국에서는 고무탄으로 하고 있는데 저위험탄이라는 개발사업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용혜인 위원께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여서……

○고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4년에 걸쳐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드릴 수 있을까요?

○고동진 위원 검토 결론을 그러면 정확히 좀 얘기를 해 봐요, 간단하게.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그러니까 이거는 고무탄과는 비교할 일이 아니고 38과 비교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무탄을 도입할 것인가는 이것과 별개의 차원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검토 예정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다른 데 맞아도 38 대비하면 10분의 1 이상……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맞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하 안전하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38이 10배가 강하기 때문에 관통을 하게 되면 제3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맞아서 피해 입을 수도 또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고 한테 이거는 그런 위험성은 최대한 낮추는 측면이 있다고……

○서범수 위원 낮추면서 혹시 제압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사실은 오히려 그런 걱정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를 뚫고 6cm를 들어가기 때문에 제압력이 없다 이렇게도 단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런 다 실험해 봤을 거잖아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사실은 저희가 피부는 젤라틴……

○서범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도 4년 동안 연구를 하고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그런 실험 같은 것도 다 했을 거잖아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6cm를 뚫고 들어갔을 때……

○서범수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저위험권총을 만드는 기대효과가 뭐예요? 일단 사람이 살상하는 걸……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맞습니다. 38보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경찰관이 많이 쓰겠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점을……

○서범수 위원 아니기는 뭘 아니예요. 1년에 경찰관이 38권총 몇 번 사용합니까, 1년에 전체.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올 초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장에서 실탄은 한 번 쏘았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서범수 위원 그렇다면 이걸 보급하면 더 많이 사용하겠네. 그렇지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8을 써야 될 때 저희가 이 총기로 사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잠깐만. 이 38구경을 구매하는 비용과, 어차피 38구경은 전부 다 보급되어 있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38구경 전체를 저위험탄으로 교체하는 데 총 들어가는 비용은? 교체하는 거잖아요, 방침이 바뀌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위험권총을 만든 계기는……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계기를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까 제가 질문한 것에만 답을 해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이걸 다 대체하는 게 아니고 38도 쓰고 이것도 쓰고 한 절반 절반 정도 규모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원장 위성곤 그게 무슨 말이야.

○경찰청차장 유재성 38도 사용을 하고 이것도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완전 대체는 아닙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어떤 경찰관은, 경관이 2명 있는데 한 사람은 38구경을 들고 한 사람은 저위험총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정책입니까?

○양부남 위원 모든 경찰관들이 권총이 하나씩 다 있는가요?

○서범수 위원 없어요.

○양부남 위원 없으면 2정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현장에서 사용할 때 38권총은 예를 들어 차량이 돌

진해 왔을 때 차 타이어라든지 펑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현장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38권총도 필요한 거고……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2정씩 줄 거예요? 38도 주고 저위험권총도? 말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양부남 위원 상황에 따라서 주겠다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예,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소위원장 위성곤 상황이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저위험권총을 달았는데 차량이 달려들면 그건 뭐 어찌라는 거야.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 저위험권총을 쏘서 인명 살상의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는 게 목표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차량의 돌진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상황이 그렇게 발생을 안 하잖아요. 38구경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차량이 돌진하는 게 아니라 차량은 38이든 저위험권총이든 갖고 있는 누구에게나 돌진하게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응대할 수가 없는데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현장에 2인 1조……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38권총이 지금 전체 몇 개가 지급돼 있습니까?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지금 한 5만~6만 정도 사이……

○소위원장 위성곤 5만~6만 대를 2만 5000정 저위험권총을 도입하면 총 얼마예요, 예산이?

○전문위원 나아정 지금 권총 136억 8900만 원이 9126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1대가 얼마인지. 그래서 아까 2만 5000자루 하면?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1정에 지금 150만 원이고 앞으로 저희가 도입 목표로 하는 것은 2만 8000정이 됩니다.

○양부남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만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계산해야지요, 정확하게 예산을.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우리나라 전 경찰관들에게 개인 권총이 지급된 게 아니라면서요? 개인한테 다 하나씩 지급됐습니까?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아닙니다.

○양부남 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8구경을 써야 될 상황이라면 38구경을 가져와서 제압하는 것이고 38구경이 아닌 저위험총으로 제압할 상황이라면 이 총을 가지고 가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총을 2정씩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 경찰관들이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38구경도 가져가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방금 저위험총을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나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렇습니다, 보통 2인 1조로 순찰을 돌기 때문에.

○서범수 위원 그런데 순찰하다가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신고를 받고 무슨 상황이라면 38을 갖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저위험권

총을 갖고 가야 되겠다 판단이 되지만 현장에 나가서 순찰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신고받고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파출소에 와 가지고 거기에 맞는 권총을 갖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고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순찰을 돌 때 2인 1조로 순찰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은 38권총을 차고 한 사람은……

○**서범수 위원** 그런 논리라면 지금 한 사람은 가스총 내지는 테이저건을 갖고 다니잖아요, 또 한 사람은 38권총을 갖고 다니고. 그러면 그거 쓰면 되지.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맞습니다. 그런데 38권총을 사람을 향해서 쏘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위험권총을 만든 거고 저위험권총 갖고는 차량의 타이어라든지 유리가……

○**서범수 위원** 그래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면 테이저건을 쏘면 되지, 가스총을 사용하든지.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그런데 테이저는 한 7m 정도 거리밖에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게 사실은 타당성조사를 받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오니깐 그냥 금액으로 올라온 거예요. 저건 제가 볼 때 예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라고 봐요, 이 사업 총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탄창 구매까지 전부 다.

지금 있는 38구경 50%를 없애고 이걸 50% 올리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그냥 내역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서범수 위원** 이걸 보면 정책적인 판단이 먼저 앞서야 된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맞습니다.

○**서범수 위원** 차장님, 이걸 뭐냐 하면 정책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서 38권총 살상력이 크니 경찰관이 갖고 다니는 걸 저위험권총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판단이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이 예산이 들어와야 되지.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2016년도에 현장 직원들 의견을 들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아니, 그건 경찰 내부고 국민들하고도 정책적인 판단이 돼야 되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경찰 안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 할래’, 예를 들면 이 살상무기 쓰는 걸 경찰 안에서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이것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해서 모든 게 오케이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국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공감을 가지고 있고 위에서 정부 전체적으로 이게 판단이 돼야 되지.

○**경찰청차장 유재성** 저희가 그래서 38보다 더 센 것을 쓰자는 게 아니고 지역경찰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위험한데 왜 38을 사용을 안 하나, 그때는 경찰관이 칼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을 안 뽑냐, 네가 죽는데. 그러면 총을 쏘면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총을 사용해서 상대방이 다치거나 이렇게 하면 소송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찰들이 그런 우려 때문에 총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찰들이 좀 약한 걸, 바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런 무기를 찾으면 좋겠다 이런 95% 지역경찰의 의견이 있어서 이게 R&D를 시작한 거고 그동안에 성능 검증이나 이런 걸 거쳤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8권총이 한 2만 5000정 되는데, 전 외근 경찰 5만 명한테 다 있는 건 아니고 38권총이 2만 5000정이 있고 나머지는 테이저건을 갖고 다닙니다.

그런데 테이저건만 가지고는 제압이 안 되는, 멀리 있다든지 바로바로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테이저건만 가지고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38권총보다는 조금 위험도가 낮은, 그리고 테이저건보다는 정확성이 높은 저위험권총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가 조율해서 처리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관련 예산은 일단 보류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처리를 한다면 관련해서 이 예산을 수시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우선적으로 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류를 해 두고……

○고동진 위원 이건 전액 삭감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위성곤 일단 보류를 해 두고 논의를 좀 하고, 간사님과 나중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리고 테이저건이 겨울철 패딩 입으면 안 된다면서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두 줄이 몸에 다 정확하게 박혀야…… 그리고 테이저건이라는 건 어쨌든 정확성이 좀 떨어집니다, 권총보다는.

○고동진 위원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저도 쪽 설명을 들어 보니까 테이저건이 됐든 38구경이 됐든 경찰관들이 총을 쥐도 이분들이 무서워서 안 쓰는 거예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거 안 쓰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강력범에, 치안 수요에 정확히 대응을 못 하니까 지금 어찌 보면 교육지책으로 써도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총을 지급하자 이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무작정 삭감할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

○박정현 위원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고동진 위원 다시 한번 보자고 그러시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위성곤 제 의견은 보류해 두고 만약에 의결을 한다면 수시예산으로 배정을 하고 조건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이게 적당한지, 적정한지, 저위험권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고무탄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통해서 정리하고 나서 정책을 집행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현 위원 저위험권총 보급과 관련해서는 지금 2건이 있는 거고 마지막 1건은 방탄방패거든요. 이걸 동의하시는 거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방탄은 증액에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밀의 방탄은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보류로 넘겨 두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프트웨어 정품화 내역사업입니다.

한컴오피스 연간 라이선스 구입 예산 7억 95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이건 그때 행안위에서 검토한 내용하고 동일하잖아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보류해 두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면 부대의견 3번도 동일한 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보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보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12번, 경찰 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내역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찰청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 수립을 위한 9억 3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또 온나라 2.0 전환을 위한 개발비 9억 6000만 원 증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두 번째도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건 증액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2건 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AI기반 법령정보검색시스템 구축 내역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AI기반 법령정보검색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30억 32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페이지, 미래치안기반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방안 검증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종범죄 등 치안현장의 문제를 AI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신종범죄와 치안현장의 문제를 AI 기술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어떤 해결을, AI 기술로 뭘 해결을 쉽게 검증을 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0억 원을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뭘 산다는 거예요, AI 기술을?

○**경찰청차장 유재성** 해당 국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현장의 경찰관들 내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저희가 제공을 많이 받아서 수상도 한 그런 사례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광희 위원** 여론조사 같은 걸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 10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제가 보고를 조금 드리면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투자리딩방 사기 같은 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투자리딩방 사기 같은 경우 최근에 계약서만 10만 건짜리 그런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직원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 AI 기술을 통해서 이것들을……

원래 경찰관들 여러 명이 나눠서 분석하더라도 이게 40~50일 걸려야 되는 사무의 분량인데요. 이것 AI를 통해서 한 2~3일 내에 전체를 빠르게 다 분석해서……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10억에 사겠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나아정** PoC 검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Proof of Concept이라고 PoC 검증을 5건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1건당 20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걸 한번 실행해 보고……

○**이광희 위원** 1건당 2000만 원이면 5건이면 1억인데 10억이 필요해요?

○**전문위원 나아정** 2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현장에 있는 경관이 어떠한 문제를 AI로 하기 위해서 현장의 매뉴얼을 만들게 되면 그걸 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앱을 만들어서 좀 써 보고, 현장에 적용해 보고 그것을 기술화시키려면 전체가 범용으로 같이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그게 4~5년 정도가 통상 걸리는데 한 2~3년간량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여태까지 안 해 봤던 일을 해 보는 거니까.

○**소위원장 위성곤** 좋습니다.

○**양부남 위원** 신종 범죄에 대한 수사기법을 한다는 겁니까?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약범죄도 지금 온라인상 다크웹을 통해서 굉장히 만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추적하는 기법 같은 것도……

○**양부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광희 위원님 질문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광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신종범죄만이 아니라……

○양부남 위원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마약사범이 신종범죄가 나타났다. 그러면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신종범죄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걸 한다는 겁니까? 뭘 하는 거예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최종적으로는 추적해서 검거하고 사실관계를 구증할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 찾아낼 수 있는 AI를 도입하는 이런……

○양부남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소위원장 위성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종 마약사범이 온라인 사이트에 여러 가지 이상한 그림으로, A라는 그림이 신종 마약 새로운 암호예요. 그런데 못 찾는데 앱을 만듭니다. 수사관이 앱을 만들어요. 그놈만 추적하는 앱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맞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검색하는 것은 AI 하수들만 하는 거고.

○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이걸 실질적으로 검거까지 갈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부남 위원 그러니까 매 중요사건, 신종 범죄사건 수사 때마다 결국 AI의 지도를 받게 된다는 취지네요?

○고동진 위원 아니지, 그런 건 아니예요.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AI를 기술을 이용해서 범인 검거를 쉽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동진 위원 범죄가 이제 날고 기니까 잡는 사람도 날아다녀야지.

○소위원장 위성곤 워낙에 새롭게 범죄 형태가 바뀌니까……

○이광희 위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 이번 올해 예산의 특징은 앞에서도 AI가 붙어요. 그런데 그래 놓고서 이게……

아까 그게 무슨 기술이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PoC 검증……

○이광희 위원 PoC 검증이 어떤 겁니까?

○전문위원 나아정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콘셉트(Proof of Concept), 개념증명이라고 해서요, 그대로입니다. AI 기술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이광희 위원 아이디어 검증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밖에서 모아서 그런 검증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데 2억 정도씩 드는 것을 다섯 번을 하겠다 이런 거지요?

○전문위원 나아정 예.

○소위원장 위성곤 고동진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그냥 해도 돼요.

○양부남 위원 그래요, 믿고 합시다.

○소위원장 위성곤 10억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자율비행 AI순찰드론 구매 및 원격관제플랫폼 구축 그리고 드

론스테이션 구매를 위한 신규 내역사업 23억 30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양부남 위원 고동진 위원님 믿고 가?

○소위원장 위성곤 한 번 더 믿읍시다.

○고동진 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소방청에서도 이 예산을 다 요구하고 있는 게……

○이달희 위원 이걸 진짜 필요합니다.

○고동진 위원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 사람들 구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범죄 예방에도 지금 이것을 도입하는 게 맞아요, 무조건.

○이달희 위원 골목 속의 저 구석으로 도망가면 드론이 찾으려 갑니다.

○고동진 위원 경찰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양부남 위원 그러면 순찰차를 다 없애 버려야 돼, 아까 순찰차.

○이달희 위원 순찰차 안 들어가는 데 이것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범죄예방대응국 소관입니다.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세부사업입니다.

기동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기동순찰대 폐지 및 지역경찰로 인력 재배치를 위해 49억 7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24페이지의 부대의견 2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은 현장 중심 치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동순찰대를 폐지하고 해당 인력은 전원 지역경찰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것 일단……

○이달희 위원 보류.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경찰청차장 유재성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 얘기는 보류를 해 두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자율방범대 관리시스템 및 교육자료 내역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관리시스템의 교육훈련 그리고 중앙회 지원을 위한 예산 3억 39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이 내역사업에는 독립 서버 유지비 4400만 원과 교육자료 제작비 2000만 원 해서 6400만 원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112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차세대 112시스템 개발 ISP 수립을 위한 예산 8억 76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안되었습

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시스템 어떻게 고치려고 합니까?

○이달희 위원 지금 잘되어 있는데……

○서범수 위원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고치려고 그래요, 112시스템을?

○이달희 위원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뭐예요?

○소위원장 위성곤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범죄예방대응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112시스템은 효율적으로 지금까지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신고 들어오면 단속 현황이나 기록관리 정도에 불과합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AI 시대가 도래되었고 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 될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AI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합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반복신고 이력이라든가 또 예전에 보도 사례에 많이 있지만 신고자들이 실질적으로 억압된 상황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고 특정한 신호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AI를 통해서 분석하고요. 또 우리가 가용자원을 동원하고 배치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이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도록 하고……

○서범수 위원 ISP 예산에 8억 7600만 원인데 전체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산을 해요?

○경찰청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전체 사업비는 400억 정도 아래로 보고 있습니다. 예타까지는 안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위원 예타까지 안 가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지.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증액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생활안전교통국 소관입니다.

교통안전활동 세부사업 내에 있는 기타교통활동 지원 내역사업에 3건의 증액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체납과태료 징수실적 우수관서 포상금 예산을 현행 26년 예산안 6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 도로교통법 전면 개정 및 하위 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 3억 원 증액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고령운전자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지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년과 동일한 지원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예산 13억 5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에 똑같이 27억이 반영되었는데요. 지난해에는 9만 명당 3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27억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에 대해서는 3만 원, 실운전 증빙 반납자 3만 명에 대해서는 6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2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만 명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3건 모두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여기 세 번째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는 것 돈 주는 게 실효성이 있어요? 판단해 보시기에는 어때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금액이 좀 적은 면은 있지만 그래도……

○고동진 위원 아니, 얼마를 주든 그걸 돈을 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경찰청 내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주는 게 좋냐?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어쨌든 실효적으로 이걸 끌고 가려면 돈을 좀 지급하는 것이……

○고동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요새 언론에서도 자꾸 보도되는 게 고령운전자들이 급발진이 났든 브레이크나 엑셀레이터를 오작동을 했든 간에 사고들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캠페인을 해도 반납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거든요, 특히 생계형이나 자기가 꼭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돈 주고 반납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고령자, 예를 들어서 70이 넘어갔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인지능력 검사를 한다든가 주기를 좀 좁혀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는 적성검사라든지 이것을 단축해서 하고 있고요.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감액을 하자 이런 것은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제도적으로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엇그제도 부천시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고령자같지는 않은데 트럭이 막 밀고 들어가서, 특히 노인네들한테 그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고령운전자가 자기가 운전이 조금 안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안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권이 안 좋기 때문에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버스 이런 것도 자치단체하고 운영도 해서……

○고동진 위원 돈 쥐 가지고 운전면허 반납하게 하는 것은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고……

○고동진 위원 그것 여기서 감액하자 이런 얘기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알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우수관서 포상금이 정부 예산안에 비해서 4배나 올라갑니다. 그렇지요? 60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이잖아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서범수 위원 체납과태료 징수실적도 4배로 올리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서범수 위원 내가 결산 때 따집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하여튼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서범수 위원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교통국장 해 보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별도 징수팀도 내년에는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지방정부로 넘기면 금방 됩니다.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속도를 좀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위성곤 예, 의사진행발언 기가 막힙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교통과학장비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에 있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내역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인단속장비를 위탁 관리하는 유지비용 예산의 현실화를 위한 위탁관리비 463억 72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서범수 위원 요새도 이것 도로교통공단에 맡깁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점검하는 것이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했는데 요즘은 원격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점검비용이나 이런 걸 절감할 수 있어서 원안 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증액에 반대한다는 얘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위성곤 필요 없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소위원장 위성곤 위탁하지 않고 경찰이 직접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경찰청차장 유재성 직접은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데 그 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정부 측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21번 도로교통공단출연금 세부사업입니다.

이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9억 원 감액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안전교육원 건립을 위한 예산 20억 5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운전면허시험장 64억 4000만 원 증액의견입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첫 번째, 세종에 면허시험장 만드는 것은 정부 원안 유지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안전교육원 건립과 관련해서는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운전면허시험장 증액의 건은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얘기를……

세종시 운전면허시험장 관련되어서 김종민 의원께서 감액의견을 낸 이유는, 요청을 받았는데 주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민 수용성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김종민 의원께서는 수시배정으로 변경해서 부대의견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이 오셨는데요, 감액을 안 하는 대신에. 건립 예산은 기재부 수시예산을 배정하고 주민 동의를 전제로 집행할 것, 이 정도의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원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증액은 증액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교통행정전산화 세부사업입니다.

22번, 전산시스템 신기술 확대 관련입니다.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ISP를 위한 예산 6억 35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26년 컨설팅 용역비 1억 8500만 원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가정폭력 아동 등 학대 근절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보호팀 역량 강화 예산 4억 500만 원 증액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여성대상범죄 예방 및 보호활동 내역사업입니다.

피해자 보호팀 포상금 1억 3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성 범죄 대응 수사관서의 우수관서 포상에 관련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둘 다 증액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25년 피해자 보호활동 내역사업과 관련하여서 두 가지의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 범죄피해평가 전문가 수당 33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두 번째, 스토킹 교제폭력 고위험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능형 CCTV 설치 예산 10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2건 모두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해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수사기획조정관 소관입니다.

수사지원 세부사업 내에 있는 현장수사활동경비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특정업무경비 61억 47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것은 25년 예산 수준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차세대 KICS 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경찰관서 조사실당 스캐너 1대, 총 4627대를 배치하기 위한 33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왜 필요하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청장께서는 책임지고 기재부를 통과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지금은 없나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조사실에 스캐너……

○이달희 위원 없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앞으로 이게 전부 전산화가 됩니다, 형사 서류가. 그러면 이걸 다 스캐너로 떠 가지고 전산에 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26년에도 지역경찰관서당 1대를 배치하는, 2045대를 배치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예.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수사인권보호활동 세부사업 관련입니다.

진술영상녹화실 운영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26년도 신규 설치 15개소 예산의 20%인 6100만 원 감액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형사사범업무전산화 세부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형사사범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형사사범포털의 비정형 멀티미디어 분석 기능 구현을 위한 53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견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수사 능력 배양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청장께서 책임지고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증액 의결합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수사국 소관입니다.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센터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및 시도청 피싱사기 전담 수사부서 운영비 7억 7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견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통합대응단이라면 누구, 어디어디를 구성하는 거예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이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경찰과 그리고 금융위·과기부 등 정부기관, 이렇게 보이스피싱과 관련 있는 부서가 한 군데 모여서 전화에 대한 차단 활동도 미리 하고……

○**서범수 위원** 사무실이 어디 있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광화문 KT빌딩에 있습니다. 140명 규모가 지금 근무를 하고 일선의 수사팀도 같이 연계해서 전 종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 자료 한번 좀 받아볼 수 있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의원실로 부탁드립니다.

○이광희 위원 이참에 보이스포싱 확실하게 잡아 주십시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이달희 위원 이것 주무부처가 경찰청이에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경무관이 단장으로 해서 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노후된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90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14억 4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형사국 소관입니다.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형사활동 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25년 10월 신설된 중대재해 전담수사팀 지원을 위한 8억 11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결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경찰대학 소관입니다.

단일 세부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해외 고위급 경찰관 대상 지휘관 역량 강화 교육과정 신설을 위한 예산 2억 300만 원 증액 의견 그리고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의 외국 경찰관 대상 교육 등에 필요한 오디오비주얼 시스템 구매·설치를 위한 예산 3억 3100만 원 증액, 신입경찰 및 관리자 대상 헌법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6억 34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3건 모두 증액 의결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여기 잠깐……

앞의 2건은 이해가 되는데, 특히 동남아라든가 국제경찰 교육 관련해서.

신임경찰·관리자 대상으로 올바른 공권력 행사,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헌법교육의 추진을 위해서 6억 이상을 하겠다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경찰은 안 해 왔어요? 뭘 새로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2건은 범죄가 그렇게 다양화되고 특히 동남아 이런 쪽에서 뭐 막 하니까 그리고 안 했던 거니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이 국민기본권 보호, 체계적인 헌법교육 이런 걸 안 해 왔다고 얘기입니까?

○경찰청재정담당관 이광진 기존에 총경이나 경정부터 해서 현재도 교육과정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 중심으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가 보다 체계적으로, 아까 저희 의도처럼 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그런 교육기관에 가서 일부 위탁교육까지 같이 수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더 추가하는 겁니다.

○고동진 위원 외부에서도?

○경찰청재정담당관 이광진 예, 그 과정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고동진 위원 교육비만으로 6억 이상을 증액한다?

○서범수 위원 여기 신임경찰관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경찰청재정담당관 이광진 경대생과 경위공채, 경력채용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거야 그 학과 과정에서 공부하면 되지 왜 따로 이걸 해요?

○고동진 위원 그러니까.

○서범수 위원 거기 헌법 있잖아.

○박정현 위원 공부가 잘 안되니까 그러지요.

○서범수 위원 있잖아요, 경찰대학교 과목에 헌법이 있어요.

○이달희 위원 그래도 이론……

○서범수 위원 제가 경찰대학 학장 출신이에요.

○박정현 위원 안 해 본 게 뭐 있어요, 경찰?

○고동진 위원 이건 조금 너무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소위원장 위성곤 헌법교육은 강화해야지요.

○서범수 위원 헌법교육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달희 위원 교육해야지. 그런데 돈을 넣어 가지고……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현장체험과 그다음에 현장순례 이런 과정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소위원장 위성곤 누구인지 밝히시고 말씀하세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입니다.

○고동진 위원 말씀하세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현장체험과 현장순례 과정까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고동진 위원 현장체험?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민주화운동 기념관 등 역사적 또 상징적 장소를 방문하고 견학·탐방까지 같이 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소요됩니다.

○서범수 위원 경찰대학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총경·경정·경감 그리고 간부후보, 그렇지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예.

○서범수 위원 다 그 과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그런데 기존에는 실내에서만 하는 교육 위주였는데……

○서범수 위원 실내가 아니고, 총경들도 헌법재판소 가면 되는 거고 다 현장체험 하잖아요. 거기 돈이 있잖아.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그러니까 그런 과정의 강사료도 그렇지만 이동 비용이라든가 또 이렇게……

○소위원장 위성곤 비용이 들어가는 거지.

○서범수 위원 아니, 다른 프로그램을 전환하면 되지, 어디 산업시찰 가는 걸.

○경찰청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그런데 순례 과정이나 체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고동진 위원 세 번째 건 세부 내역을 제출하고 보류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소위원장 위성곤 세 번째 것도 그냥 증액 가지요, 헌법교육 한다는데.

○서범수 위원 증액합시다.

○고동진 위원 아니,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서범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줘 보세요. 세부 계획을 줘 보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통과는 시키시고?

○소위원장 위성곤 예, 증액하는 걸로 하고요. 그 세부 프로그램을 가서 설명을 좀 드려 주십시오. 인사기획관님, 가서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빨리 진행하세요.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중앙경찰학교 소관입니다.

중앙학교인건비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26년 3월부터 교육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800명 교육인력에 대한 2개월치 예산 27억 300만 원 감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감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요?

경찰대학 학장님, 이것 어때요?

○서범수 위원 이걸 중앙학교라서 잘 모릅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위성곤 감액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경찰수사연수원 소관입니다.

수사경찰전문교육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사교육운영지원 사업에서 서울신입수사교육센터 구축 및 교육용 PC 구매를 위한 12억 82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증액 의견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대의견인데요. 부대의견은 앞서 얘기된 것과 연계되어 있어서 추후에 보류된 예산 하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 추가로 부대의견을 제기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동진 위원 아까 대행님 말씀하신 것 중에 면허 갱신이라든가, 현재 한 3~5년? 70 이상 된 분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조금……

○고동진 위원 그걸 좀 단축하는 방법 그다음에 현재 인지능력 평가만 하고 있잖아요, 75점 이상.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고동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걸 부대의견으로 넣을 테니까 더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동진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하나만 추가를 하겠는데요.

범피기금 관련입니다. 범피기금이 만들어진 것에서 경찰관이 한 3% 정도 쓰나요? 거의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저희가 적게 사용을 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부대의견을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경찰청이 범피기금 예산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욱더 철저히 강화할 것’ 이렇게 제가 부대의견을 달아드리면 이 근거를 가지고 법무부랑 범피기금 사용과 관련되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범피기금을 검찰청이 주로 사용해 왔잖아요. 그런데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기소청과 그리고 공수청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에 따르는 경찰의 대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대행님,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우리 청소년과 많이 연계돼 있잖아요. 이 건 시간과의 싸움인데, 많이 확산되기 전에 빨리 차단하고 삭제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AI 시스템이나 이런 게 도입돼 있나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저희가 딥페이크를 판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은 도입이 돼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그런 관련 R&D 예산과 인력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가 있는 디플

정하고 여러 협력기관들 있잖아요. 그 공조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더 필요한 건 없나요? 그것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그건 나중에……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별도로……

○이달희 위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청소년들이 이것 때문에 자살도 많이 하고 괴로워하고 또 성착취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모자라는 게 있으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점검을 확실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한지 그 부분도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경찰청 소관 심사를……

○양부남 위원 제가 잠깐만, 10초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1분 하십시오.

○양부남 위원 아니, 10초만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양부남 위원 지금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게 검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검찰청과 무관하게 기금을 모아서 범죄피해자를 물질적으로도 지원하고 여러 법적 지원도 하고 있는 그 업무를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어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아닙니다. 저희는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상담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피해자가 보호 요청을 하면 거기에 AI 지능형 CCTV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 보호 조치들이……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경호……

○양부남 위원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지 범죄피해자기금을 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뭘 도와주고 그런 건 안 하고 있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기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경찰청차장 유재성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다 설명은……

○소위원장 위성곤 누가 이거, 담당 국장이 여기는 없지요? 담당자.

나중에 자세히 한번 좀 받아……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 부분을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그런 업무를 안 한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금 활용이 별로…… 소관기관이 아닌데 주면……

○소위원장 위성곤 아니, 범피기금 100% 중에 한 3%인가 5% 정도를 경찰이 배정받아서 하는데 주로 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 숙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요?

○경찰청차장 유재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제가 작년도에 국감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서 드리

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상 경찰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찰청장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남아 있는 건수가 한 30건 정도 남아 있어서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위성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진호 기획조정관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왜 대행은 안 나오고.

○소위원장 위성곤 인사 전에 소방청 차장께서는 울산 현장에 가 계셔 가지고 오늘 이진호 기획조정관이 대신 인사드리고 답변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아직 한 분은 못 찾았어요? 위치 파악이 안 됩니까?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예, 아직 한 분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인사해 주십시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청 기획조정관입니다.

현재 청장직무대행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8일째 울산 붕괴 현장 지휘 중에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었는데 현장이 매우 위험한 데다가 11개 시도의 대규모 소방력을 동원했고 그리고 실시간 발생하는 위험 변수에 대해 중수본부장과 신속한 결정을 하면서 지금 수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아홉 분 중에서 여덟 분에 대해서는 수색 구조가 다 완료됐고요. 지금 한 분 남아 계십니다. 현재 유족분들도 현장에 남아 계실 것을 계속 원하고 있으셔서 부득이 참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재난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첨단 기술개발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전문위원님, 1번 사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소방청 세입세출예산 심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15개 내역사업에 3건의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15개 중 8개가 신규사업이고 모두 증액 의견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 찾아가는 상담실 관련입니다.

내역사업 찾아가는 상담실은 외부 전문 상담기관 상담사가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 상담사 1명이 2개 소방관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1명의 상담사가 1개 소방관서를 담당할 수 있도록 28억 79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은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만 없네요.

○이달희 위원 내 이름도 없습니다.

○고동진 위원 아니, 어떻게 위원장 이름이 빠져 있어요?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니까요.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내역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심신안정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2~4일간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하는 사업인데 전국 대형재난 등에 출동한 대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3번입니다.

마음건강 상담·검사 진료비 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소방대원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진료비 3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페이지, 국립소방병원 건립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경상경비와 관련하여 소방병원 개원이 26년 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7개월분의 외주용역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개원 전 5개월분의 외주용역비 추가 반영을 위한 8억 5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일반비품 내역사업입니다.

내역사업 일반비품과 관련하여 수술실·무균실 클린룸 조성 설비 구비 등에 필요한 12억 2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정주여건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관사 지원하는 예산인데 26년에 현재 의사직 25명분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직 24명과 일반직 26명분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8억 17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조성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대형산불대응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산불전문진화차 등을 도입하기 위한 예산 증액 의견이 2건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 차량구입비 19억 4500만 원 증액 의견과 경상남도 장비 6종 25대 확충을 위한 국비 115억 25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울산하고 경남에만 필요한가요? 다른 지역은?

○서범수 위원 울산하고 경남이 유독 적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1대씩 정도밖에 없어요.

○이달희 위원 다른 데보다 적어요, 불 많이 났는데.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니, 어쨌든 다른 지역도 살펴봐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넣든 어쨌든 내년 예산에서 담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달희 위원 울산은 원래 없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원래 지방정부가 부담해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방정부가 그동안 관심이 별로 없어서……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8번, 소방차 운용역량강화센터 구축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훈련탑 1동과 운전연습코스 8종 구축 예산 12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방 예산은 전부 경북에 가는 것 같네.

다음.

○이달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소방시설장비지원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인 가죽제 방열화를 도입하려는 예산 110억 원 증액과 90억 원 증액 의견이 각각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은 1안으로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110억 원 증액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의견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대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국가재난대응시설 구축 운영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국가산단 유류화재 적응 소화약제 비축 창고 설치 내역사업과 관련하여 비축창고를 울산에 설치하는 신규 예산 13억 12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미래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데이터센터 화재대응기술개발 내역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데이터센터 화재대응기술개발 예산 15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12번, 소방 융합연구센터 구축 신규 세부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26년에 국립소방연구원 신청사 이전과 병행해서 유희지를 개발해서 산학연 융합연구 중심거점을 조성하려는 내용인데 소방 융합연구센터 구축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119종합상황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 세부사업인데 119상황실 근무자를 교육하기 위한 가상교육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실제 시스템과 동일한 훈련용 에뮬레이터 구입을 위한 9억 78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수용입니다.

○서범수 위원 이걸 어디 설치한다는 거예요?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이걸 소방학교에 설치를 해서……

○이광희 위원 청주에 있는 거 아니가요?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예.?

○이광희 위원 청주공항에 있는 거 아니예요, 시물레이터?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거기는 항공정비실…… 이걸 소방학교에서 상황실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최초 재난 대응을 하는 사람이 상황실 직원입니다.

○서범수 위원 소방청 산하에 소방학교가 몇 개 있잖아요?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예,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앙소방학교에 설치를 할 겁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소방청인건비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인건비 관련입니다.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따른 인건비 23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13페이지 부대의견 세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을 위해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으로 상향한다는 부대의견이 함께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직급 상향할 거예요?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지금 이게 작년에 행안부 협의를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 인건비 때문에 기재부에서 아직 협의를 1년 가까이 안 해 주고 있는데 계속 기재부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달희 위원 쌍수를 들어서 지지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 이번에 예산 반드시 사수하셔야 됩니다. 아니, 2억 3000도 아니고 2300인데, 그것도 광주하고 대전 2개 합쳐서. 이것 사수 못 하시면 말이 안 돼요.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인건비 총액이 남아서 아마 이것 안 해도 직급 되면 돈 줄 거고 돈 안 받아도 직급 상향되면 잘 다닐 겁니다.

○양부남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소위원장 위성곤 돈이 문제가 아니지요.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15번, 의용소방대연수원 구축 신규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의용소방대연수원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 원 증액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정부 측 의견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부대의견입니다.

첫 번째, 소방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49만 8000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바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이 부분도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다음, 두 번째입니다.

소방청은 화재진압용 개인 보호장비 소모품 방화신발·장갑·두건이 화재진압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현행보다 개선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수용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전문위원 나아정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예산안 중 소방청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청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서범수 위원 빨리 한 사람 찾으세요.

○**소방청기획조정관 이진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앙선관위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강동완 사무차장은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 6월 3일에는 4100여 명이 넘는 지방자치 일꾼들을 선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년 선거가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여한 책임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 예산 등에 대한 각별한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전문위원은 1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는 7건의 증액의견과 1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감액의견은 없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사업을 보시면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관련입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도 제9회 지방선거 이후 회계관리 프로그램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 프로그램은 2015년 개발 이후 노후화되어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한 개발비 등 13억 75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위원님들의 관심 감사드리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처럼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이 신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증액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서범수 위원** 선관위가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요? 이게 법이 2024년도에 개정됐잖아요. 그렇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방의원 후원회 작년 7월 1일 자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서범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안에는 못 담았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노력을 했는데 저희 노력이 약간 부족했나 봅니다.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

○**서범수 위원**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를 이것을 입력하는 당사자들이지요. 사실 국회의원인 경우는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관계자들의 실질적 업무를, 그곳들의 업무를 청취해서, 국회의원보좌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국회의원보좌진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가지고 업무를 개선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의 의원들 개인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의회 차원에서 본인들이 하는 데 있어서 업무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점검해서 가지고 그 수용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넣을까요, 넣지 말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들이 이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행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행하고 이행조치 결과를 저희 의원실로 보고를 해 주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2쪽입니다.

두 번째 사업, 선거·정당관계자 등 과정 사업 관련입니다.

선거·정당관계자 연수는 정당사무처 간부와 당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및 정당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6500여 명을 교육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24년과 25년도 예산이 미반영되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수운영비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역시 위원님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검토의견처럼 선거·정당관계자 등 과정 연수운영비 증액에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 정부안에서도 저희들이 기재부에는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있음으로 만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하반기 저희들 지방선거 마치고마자 정당관계자 등에 대한 연수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선관위 관련 유튜브에서 선관위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가끔 보는데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라는 영상은 정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선거 관련되어진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가 유튜브 영상들이 좋은데 오래전에 만든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맞춰서 만들어서 거기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상을 좀 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3쪽입니다.

세 번째 사업, 유권자 과정 등입니다.

유권자 과정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미래 유권자에 대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인데 2021년부터 24년까지 정당·선거관계자뿐만이 아니라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연평균 약 3600회, 5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관련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서 감액 전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25억 97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역시 위원님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회는 검토의견처럼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유권자 과정 예산 증액에 적극 수용을 하고요.

예산이 반영된다면 초·중고 미래 유권자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또 유권자별 맞춤형 콘텐츠 및 교구개발 등을 알차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에 대한 연수 역시 실시를 하고 교육부와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업 사업도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4쪽입니다.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 사업 관련입니다.

연합뉴스 관련해서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에 뉴스리더 단말기와 프리미엄뉴스 아이디, 모바일뉴스 리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용료 예산이 24년부터 전액 삭감되어 구독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서비스 이용료 9억 12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검토의견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수용 의견입니다.

2025년부터 연합뉴스 단말기 구독료가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저희들 신속 정확한 언론 대응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5쪽입니다.

A-WEB 운영지원 관련입니다.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은 창립 이후 후발 민주주의국가의 선거관리 역량 강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보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지원을 위해 연수사업비 등 3억 19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역시 위원님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검토의견처럼 A-WEB 운영지원 사업이 증액되는 데 적극 수용을 하겠습니다.

A-WEB 사무처가 지금 인천 송도에 소재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집행이사국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A-WEB 재정 지원 필요성에 저희들 적극 공감을 하고 현재 정부안만으로는, 현재 정부 예산안에 있는 5억 8600만 원 갖고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최소한의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의 효과적 외교 자원으로 A-WEB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증액에 동의하고요. ODA 사업자금 좀 받아다가 사업을 확대하면 좋을 것 같네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ODA 부분은 내년부터 KOICA로 넘어가서 KOICA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하계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것은 우리나라가 이 기관을 설립한 거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2013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6쪽입니다.

6쪽의 6번, 7번 사업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거정보센터 UPS실에 UPS와 리튬이온배터리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선거사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증가한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강화를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 등 총 9억 9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에서 7억 9600만 원과 정보기반보호강화에서 2억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두 가지 검토의견 저희들 전부 수용이고요.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배터리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버실과 UPS실은 콘크리트 격벽으로 물리적인

공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UPS와 배터리실이 지금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터리실을 층을 달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도 확보를 해 뒀습니다. 예산만 반영이 된다면 지방선거 직전에 막바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이동할 때 조심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점검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들 정부안에 반영된 1억 500만 원 갖고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일부에 대한 보안 점검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체 시스템 71식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2억 원 증액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이것은 꼭 하셔야 되고요. 저희 행안위에서 증액을 할 텐데 만약에 정부안의 이번 증액이 국회에서 못 되더라도 다른 비용을 전용해서라도 시급히 진행을 하십시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마지막으로 7쪽, 부대의견입니다.

부대의견은 1건입니다.

낭독해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에서 선거범죄 등이 제외되어 한정된 경찰 수사 인력만으로 충분한 수사가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선거범죄 등에 대한 자체 예방·적발·단속·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내부 역량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저희 선관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그 의견을 수용하고 대응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겠습니다.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선거범죄를 경찰에서 수사할 수밖에 없고 또 선거범죄가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선관위와 경찰이 협조 체제를 통해서 선거범죄 단속의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사·단속 지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실 있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수사 연수원에 전문교육을 위탁 실시하는 등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래서 부대의견 수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예, 수용하겠습니다.

○이달희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끝내기 전에 한번 여쭙보는데 요즘도 경찰이나 선관위에서 선거사범 적발하면 특진 뭐 그런 제도가 있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경찰은 모르겠고요, 저희 선관위는 고발했다고 해서 특진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기만료 선거를 앞두고는 저희들이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특진의 기회를 줄

수 있게끔, 7급 이하들은 바로 특진을 할 수 있게끔 여지는 두고 있는데 아직은 특진할 만한 사유가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저희 반영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달희 위원** 그래서 이런 것하고 충돌될 것 같아요. 고발했는데 나중에 대법원에 가서 무죄가 났을 때 이 사람 고발해 놓고 승진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나는 되게 궁금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강동완**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서범수 위원**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중앙선관위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관위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사혁신처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용수 차장은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입니다.

우리 처가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전문위원, 1번 사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소위 자료 1쪽입니다.

인사혁신처와 관련해서는 4건의 증액의견과 2건의 부대의견이 있습니다. 감액의견은 없습니다.

1쪽입니다.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관련입니다.

2024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공무원노조 사무실 지원 예산을 복원하기 위하여 공무원노조 사무실 지원 예산 5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인사혁신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증액의견을 수용합니다.

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실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2쪽입니다.

2번 사업은 두 가지인데 내용이 유사합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재해보상 심사청구 증가 및 심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 수당, 회의 준비 비용 등 6억 80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3쪽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해보상 재심청구 증가 및 심사 지연에 대응하기 위하여 1억 56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우리 처는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018년 9월 제도 도입 이후에 공무원 재해보상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액하여 주시면 전문가 위원을 확충하고……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통과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 위성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사업입니다.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4쪽입니다.

국가시험시행 관련입니다.

현재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7급 공채 추가 방침이 금년 9월 초에 결정되어 해당 공채 2·3차 시험 실시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관련 예산 11억 33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는데요, 수용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5쪽입니다.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된 인건비 단가, 최근 누적된 고환율로 인한 환차손 등으로 실제 소요액 대비 편성 예산이 크게 부족한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93억 100만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증액 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문상 마지막으로 7쪽, 부대의견입니다.

첫 번째 부대의견은,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위험직군 공무원의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데이터를 축적하게 하고 공무상 재해요양 신청 시 인사혁신처가 정신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을 심사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말씀해 주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개인의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의 활용은 대상 공무원과의 논의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검진 내용의 공상 판정 활용 적합성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이 부대의견은 수용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용해요?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그러니까 이게 전면 수용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변경된 수정안을 말씀해 주세요, 정부 측에서.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저희 수정안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개인의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활용에 대상 공무원과의 논의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노력한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예.

○서범수 위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소위원장 위성곤 단계적으로 노력한다.

자, 다음.

○전문위원 조문상 두 번째,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협의회의 안전에 범정부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을 상징하고 트라우마 전문가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수용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부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서 전문성 높은 민간 전문가와도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사혁신처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석해도 좋습니다.

○인사혁신처차장 박용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태원특조위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진 사무처장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안녕하십니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간 많은 관심을 가지고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 진행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1번 사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아정 10·29참사 특조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1건입니다.

1페이지의 기관운영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태원참사 조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지급 현실화를 보전하기 위한 조사활동비(특정업무경비) 44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현재 7만 5000원인 단가를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인데, 현재까지 진화위 같은 경우에는 15만 원이었고 5·18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이었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저희 입장은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래서 4400만 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범수 위원 인사말씀이 너무 길었습니다.

(웃음소리)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중 이태원특조위 소관 부분은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사무처장 박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위원님들, 이틀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보류 안건이 차관 8건 그리고 경찰청 5건, 13건 남았는데 이것은 양당의 서범수 간사님이랑 이광희 위원님이랑 저랑 조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오늘 전체회의는 하지 않고, 화요일 9시에 회의를 해서 전체회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광희 위원 이 회의를 화요일 날 9시?

○소위원장 위성곤 예.

○고동진 위원 아까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가신다고……

○소위원장 위성곤 예.

○고동진 위원 그러면 여기도 둘이 들어가야지. 왜 2 대 1로……

○소위원장 위성곤 그건 위원장이고 양당의 간사가 들어오는 거여서, 그건 어디나 그렇게 룰이……

○이달희 위원 위원장님은 중립입니다. 여야 없습니다.

○소위원장 위성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예산안 심사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여러분, 국회 공무원 및 보좌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전체회의 의결에 필요한 소위원회 심사보고 자료 작성과 부대의견 자구 수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장을 비롯한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고동진 김성희 박정현 서범수 양부남 위성곤 이광희 이달희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전문위원 조문상

전문위원 나아정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지역사회혁신TF팀장 박원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기획관 이상민  
인사혁신처  
차장 박용수

경찰청  
차장 유재성  
경무인사기획관 김병찬  
국제협력관 이재영  
미래치안정책국장 도준수  
범죄예방대응국장 이승협  
재정담당관 이광진

소방청  
기획조정관 이진호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 박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참석회의의록